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1. 경기종합지수

2. 통계로 보는 Economic 프리즘

- 우리나라 경제의 오늘&내일을 말하다
- '행복한 성장'을 담아낸 충남경제비전

3. 다시보는 2014년 Economic 프리즘

4. 충남경제뉴스 및 시책

- 충남경제뉴스
- 경제지원시책

5.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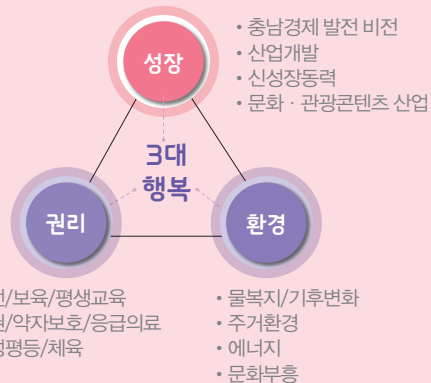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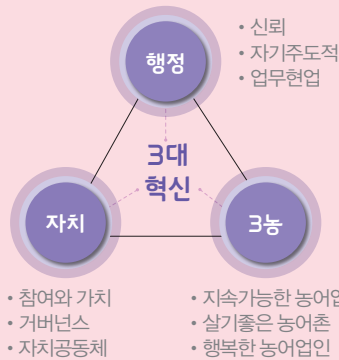
- 통계표

ISSN 2093-0844

january **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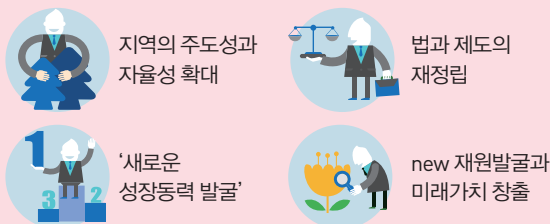
충남의 2030경제 비전, 이렇게 해 보아요.

3대혁신(행정,자치,3농)을 이어갈 새로운 3대 행복(성장, 권리, 환경) 구현!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비전 수립을 통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성공적인 충남경제비전 '행복한 성장'을 위한 조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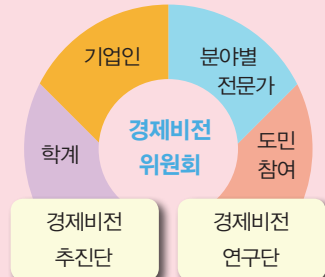
지방정부주도의 새로운 계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과정



미래가치를 반영한 충남의 핵심이슈 발굴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2015.1 JANUARY

02 총괄

03 경기종합지수

04 통계로 보는 Economic 프리즘

04 우리나라 경제의 오늘&내일을 말하다

06 '행복한 성장'을 담아낼 충남경제비전

08 다시보는 2014년 Economic 프리즘

52 충남경제뉴스 및 시책

53 충남경제뉴스

57 경제지원시책

59 부록

60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61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63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9 4. 주요 해외경제지표



발행인 안희정 · 강현수

편집위원장 김하균 · 이상진

집필진 | 총괄 | 김양중 | 경제동향 | 백운성, 이민정, 김혜정 | 경제일지 | 윤찬수, 강현일

발행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연락처 (041)840-1165

편집위원 김현철 · 신동호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팩스 (041)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세부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충남경제동향 총괄

- ❖ 최근 충남의 경제동향은 대내적으로 생산과 수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과 내수소비는 약간의 부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하락세가 이어지던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입 등 경제지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성 있음.
- ❖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과 유로지역의 회복세 미미, 주요 대외거래 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3.4%→3.0%) 등 대외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경기종합지수 (11월, 2010=100)	동행	120.8	전월비(%)	0.2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폭의 하락세 전환
	순환변동치	99.7	전월차(p)	-0.1		
생산활동 (11월, 계절조정, 2010=100)	생산지수	112.8	전년동월비(%)	-0.1		생산이 2개월 연속 위축되었으나 출하는 증가하였고, 재고 증가폭도 완화
	출하지수	115.3	전년동월비(%)	1.7		
	재고지수	139.3	전년동월비(%)	1.0		
기업 BSI 업황지수 전망 (1월)	제조업	76	전월차(p)	-2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연초 경기에 대한 기대감 동반 하락
	비제조업	67	전월차(p)	-2		
소비 (11월)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147.5	전년동월비(%)	0.6		내수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물가 (12월, 2010=100)	소비자	107.9	전년동월비(%)	0.0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성은 미미한 가운데 생활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함
	생활물가	104.1	전년동월비(%)	-0.9		
대외거래 (12월, 백만불)	수출	5,582	전년동월비(%)	2.2		위축되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입이 2개월 연속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수입	2,695	전년동월비(%)	-5.5		
고용 (12월, 천명, %)	경제활동인구	1,131	전년동월대비(%)	-0.5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고용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으며, 30~40대 청장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함
	취업자수	1,098	전년동월대비(%)	-0.7		
	실업률	2.9	전년동월차(%p)	0.2		
금융 (11월, %, 개)	어음부도율	0.23	전월차(%p)	-0.06		신규법인수가 전월보다 18개 감소하였으며, 3개월 연속 논산의 어음 부도율이 높게 나타남
	신규법인수	238	전월차(개)	-18		
부동산 (12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105.8	전년동월대비(%)	3.1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 - 천안 서북구, 천안 동남구 천안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학생, 신혼부부 등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전세 증가세는 여전
	주택전세 가격지수	109.3	전년동월대비(%)	4.1		
건설 (12월, m2)	건축허가면적	701,745	전년동월대비(%)	-5.0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의 허가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총허가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감소함
	건축착공면적	420,331	전년동월대비(%)	25.1		

충남 경기동행종합지수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7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동행종합지수도 120.8로 전월대비 0.2% 상승함

-11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약세를 지속하던 수출액이 소폭 상승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상승하였으나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입액,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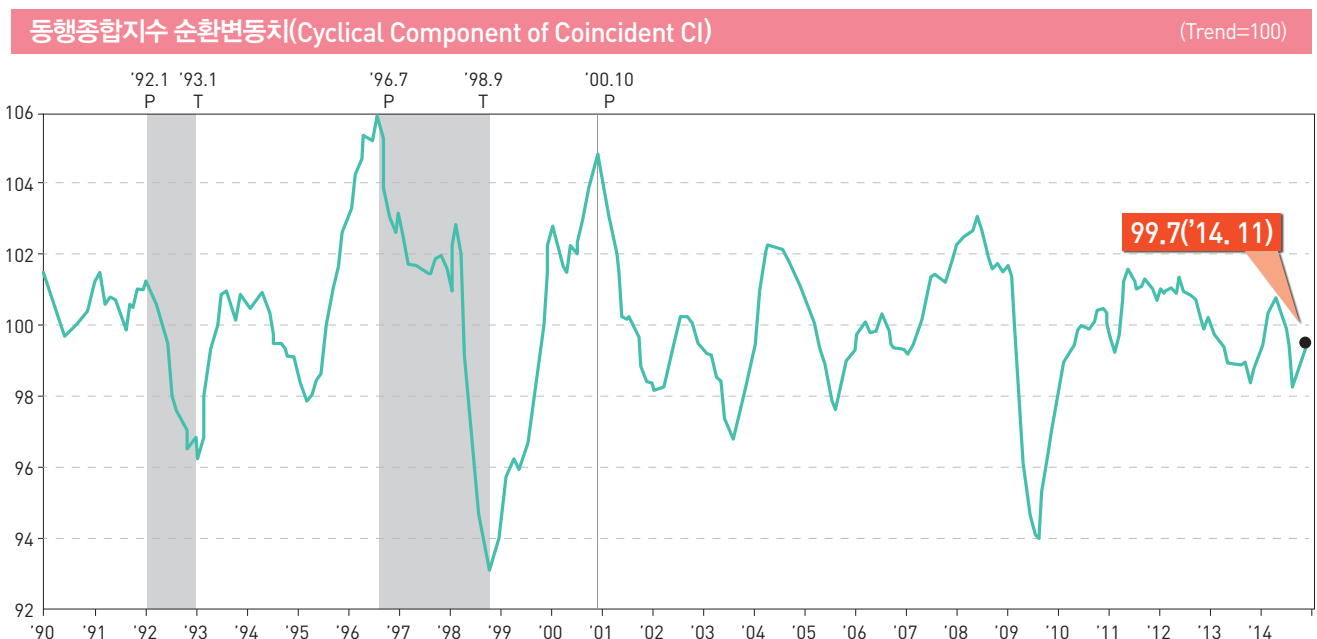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분	'14.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11월 ^P
○ 동행종합지수	118.3	118.2	117.8	118.5	119.4	119.9	120.5	120.8
• 전월비(%)	-0.7	-0.1	-0.3	0.5	0.7	0.5	0.5	0.2
○ 순환변동치	99.2	99.1	98.5	98.8	99.3	99.5	99.8	99.7
• 전월차(p)	-1.1	-0.1	-0.5	0.3	0.5	0.2	0.3	-0.1

주1) 동행종합지수는 수치오류, 연간보정 등으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은 변동요인이 큼

주2) 대략적으로 3~4개월치를 잠정치로 표시함(p는 잠정치임)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증감률 (전월비, %)								
구성 지표	'14.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11월 ^P
비 농 가 취 업 자 수	-0.8	-0.8	-0.5	1.0	0.6	0.7	0.1	0.8
산 업 생 산 지 수	-0.2	-0.5	-0.9	0.3	0.6	0.5	-0.4	0.5
대형소매점판매지수	-3.1	2.5	0.4	0.8	3.4	-0.3	3.5	-1.5
전 력 사 용 량	-0.5	-0.3	0.1	0.5	0.6	0.0	0.7	0.5
수 출 액 (실 질)	0.0	0.0	0.8	-1.1	-0.8	-0.8	-0.3	0.7
수 입 액 (실 질)	-1.7	0.5	-1.8	1.2	1.8	3.1	2.3	-1.3

주) 각 구성지표의 전월비는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원계열 또는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비와 차이가 있음.



주) P: 정점(Peak), T: 저점(Trough)

최근 경제 상황은?

* 본 인포그래픽은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보도자료를 재구성하였음(일부 통계수치 수정)

지출 측면



2분기 위축되었던 민간소비 개선
-0.3%('14.2분기) → 1.0%('14.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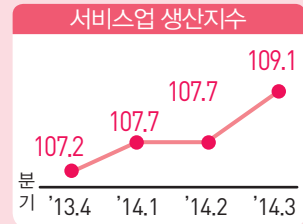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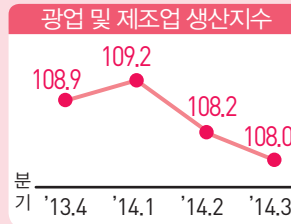
설비투자심리 회복은 지연



건물건설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세 지속

생산 측면

광공업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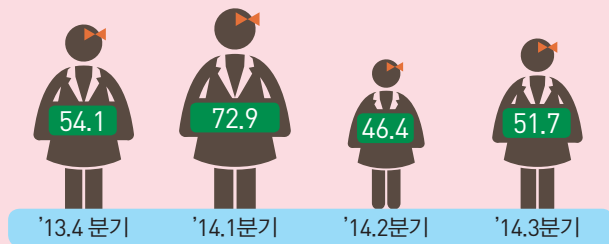


※ 계절조정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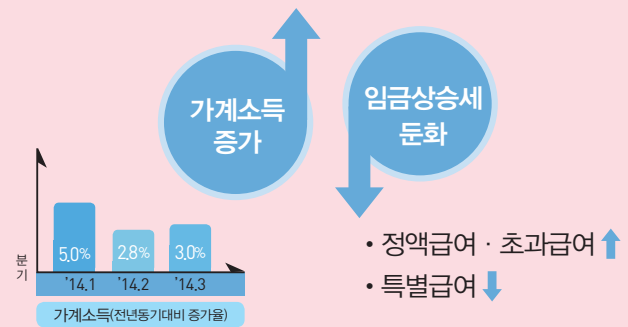
고용 측면

장년층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 분기별 취업자수 증감(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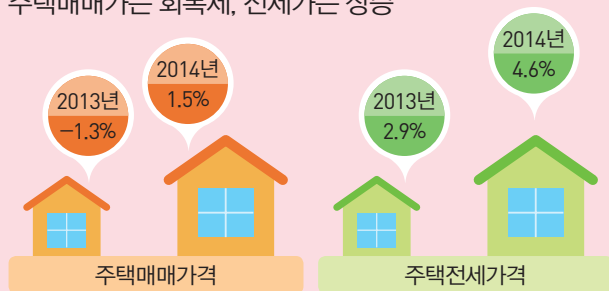


가계소득과 임금



물가와 부동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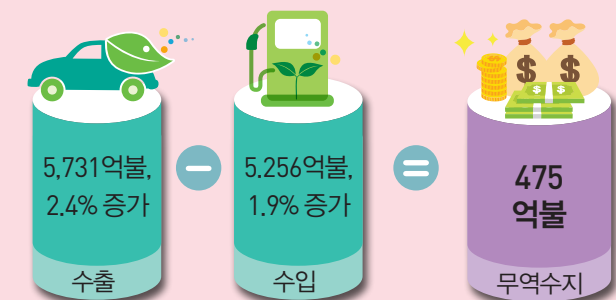
1%대 초중반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는 회복세, 전세가는 상승



자료 : 한국감정원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입 현황

완만한 수출입 증가세



자료 : 관세청

금융시장과 자금시장

- 금리인상 가능성, 추가 금융완화 조치
- 기업실적 등 변동성 지속
- 기업대출 규모 , 부도업체수, 기업대출연체율은 감소추세
- 주택거래량 → 주택담보대출
=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외환시장



우리나라 경제의 오늘&내일을 말하다

2015경제 전망은?



‘행복한 성장’을 담아낼 충남경제비전

성공적인 경제비전 수립을 위한 조건

충청남도도는 지난 12월, 민선 5기 3대 혁신(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혁신)을 이어갈 새로운 3대 행복(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환경)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주도의 경제비전 수립을 통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주도의 새로운 계획에의 도전

과거 우리나라와 지자체의 계획은 정부주도의 계획 일변도였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 모든 시도가 같은 포맷과 내용을 만들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이라고 해도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제도와 예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 한정된 예산, 지역의 자원, 이 세 가지의 제약조건 하에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번 수립하게 될 충남 경제비전에서는 이 모든 제약조건을 계획의 기회요인으로 바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바꾸야 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되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우선순위의 재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계획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한 무(無)에서 새로운 유(有)의 창조도 그리고 있다.

충남 경제주체의 참여적·소통적 계획과정

이번 경제비전의 수립에 있어 가장 핵심은 충남의 모든 경제주체와의 참여적·소통적 계획과정을 통해 상호 학습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인, 학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의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과 과제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 각 실과와 15개 시·군 기획실과 경제비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충남의 미래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각 시군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전계획의 작성을 지원하는 경제비전연구단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도내 전 유관기관과 국책연구원, 전문가 등 협업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속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남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비전에 대한 도민수요, 경제

이슈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견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가치를 반영한 충남의 핵심이슈의 발굴

2000년 이후 충남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전국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GDP 7.2%, 우리나라 수출의 11.3%, 전국 산업단지의 10.5%를 담당할 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충남의 경제규모 확대와 성장은 오히려 외부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다양한 해결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제조기반 산업구조로 변화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소소득의 40%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역외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과 남부권과의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발달된 산업 역시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최근 3D프린터, ICT융합 등의 세계적 이슈에 따라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남에 있어 한 단계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경제비전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미래가치를 반영한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미래 정책의 기준점을 제시코자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발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국 어디서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나 경제주체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결과가 된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농어촌지역의 한계마을의 증가, 지역간의 격차 심화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를 모두 다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기획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하였고,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되고 보완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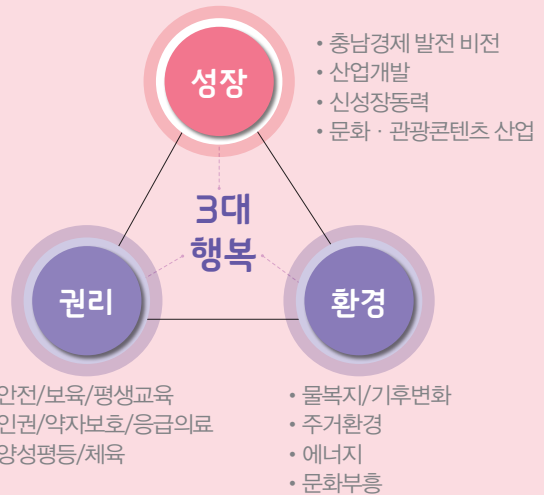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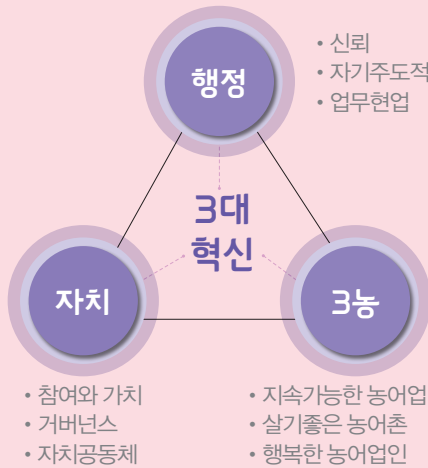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의 2030경제비전은?

충남의 2030경제 비전, 이렇게 해 보아요.

3대혁신(행정,자치,3농)을 이어갈 새로운 3대 행복(성장, 권리, 환경) 구현!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비전 수립을 통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성공적인 충남경제비전 '행복한 성장'을 위한 조건은?

지방정부주도의 새로운 계획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 확대



법과 제도의
재정립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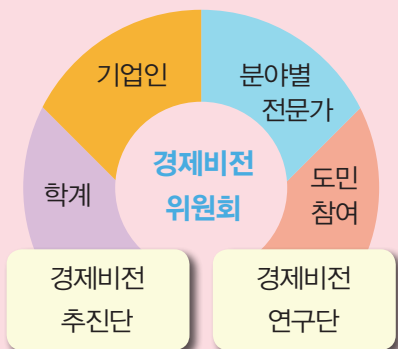


new 자원발굴과
미래가치 창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과정



미래가치를 반영한
충남의 핵심이슈 발굴



충남의 2013, 수출입 들여다보기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71%가 충남의 것’

지난해 세계경기 회복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156억 달러로 무역 흑자 4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순위 세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충남의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71%에 상당하는 312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 기여율,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수출 증가율에서도 지난해 충남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로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2.1%)을 3.0%p 상회하며 선전했다. 주요 지역과 비교에서 경기(16.0% 증가), 충북(14.1%) 등에는 뒤지나 경북(3.2%), 서울(2.8%), 인천(2.2%), 울산(-5.9%) 등에는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2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18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충남의 수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2억 달러 증가,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액에 대한 충남의 수출 증가 기여율은 26.8%로 경기도(119.2%)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충남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반도체 총수출의 약 1/3’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571억 달러로 호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남의 반도체 수출 실적은 17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31.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석유화학중간원료(비중 48.6%), 전자응용기기(48.5%) 수출은 해당 품목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가량을 충남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전자응용기기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5% 수준에서 지난해 48.5%로 큰 폭 확대됐다.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충남 수출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지난해 충남 전체 수출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81.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과의 비교에서 전남(95.4%), 울산(82.9%) 등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나 경기(62.0%), 서울(50.8%) 보다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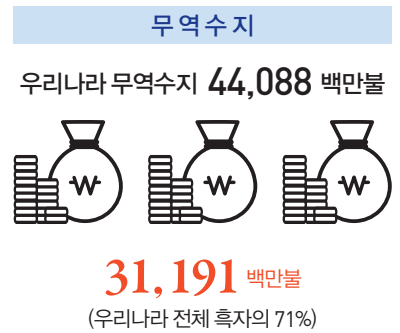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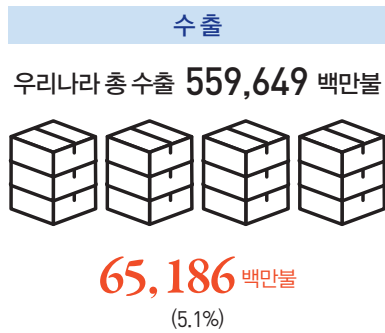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수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자칫 수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오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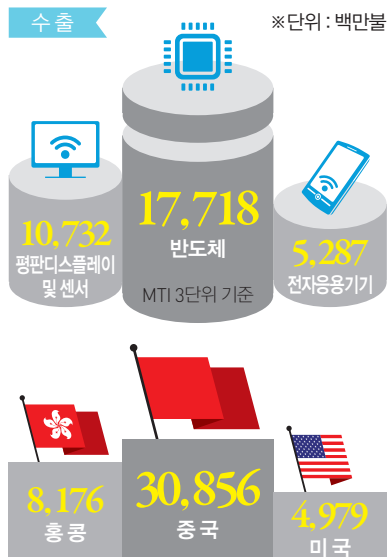


충남의 2013, 수출입 들여다보기

₩ 2013년 충남의 수출입 현황



₩ 2013, 수출입 실적 BEST3



₩ 우리나라 지역별 수출 규모 및 기여율

서울 60,334 백만불

인천 27,291 백만불

경기도 102,017 백만불

충청북도 13,738 백만불

충청남도 65,186 백만불

경상북도 53,767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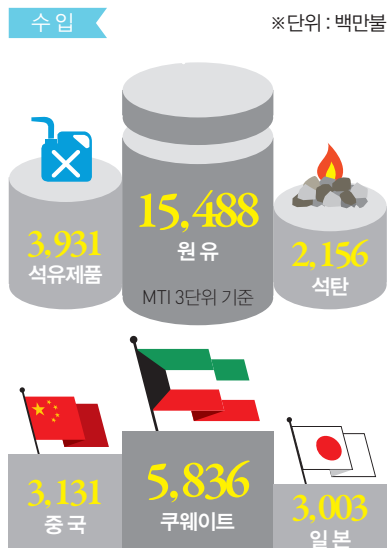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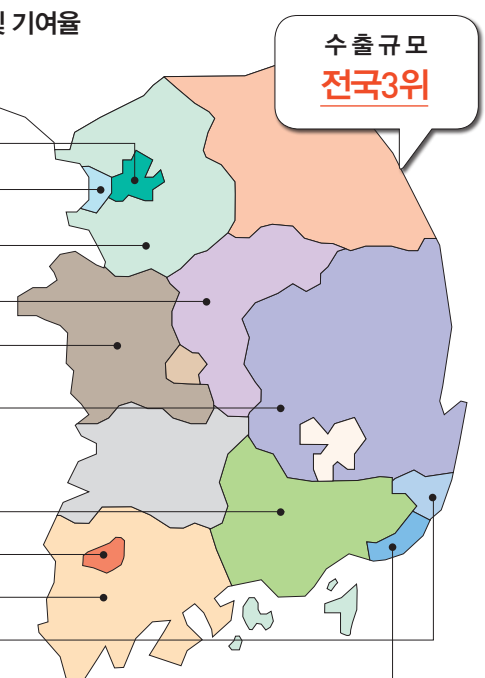
경상남도 51,840 백만불

광주 15,870 백만불

전라남도 41,407 백만불

울산 91,499 백만불

부산 13,263 백만불



수출기여율 전국2위

경기도	119.2%
충청남도	26.8%
광주	14.7%
충청북도	14.4%
경상북도	14.1%
서울	13.8%
인천	4.9%
부산	-2.5%
전라남도	-4.2%
경상남도	-35%
울산	-48.5%

충남지역 워킹맘 실태와 진단

여성 고용과 관련된 알파벳의 비밀!?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도로 신장되기 시작한 여성의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낡은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워킹맘, 슈퍼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에는 일하는 엄마의 고단함과 특별함이 여전히 묻어있다. 본고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많지만, 일하는 엄마는 적은 한국 사회의 단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힘들게 양성한 양질의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워킹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인 25세~39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알파벳 M과 같다하여, M-curve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에서 큰 변화가 없는 종모양의 역U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안 돌아오는 것인가? vs 못 돌아오는 것인가?’

한편, 이러한 경력단절은 고학력 여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을 생애주기에 따라 그려보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한번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며, 이때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L과 같다하여, L-curve라 한다. 그렇다면,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까? 가구 소득이 높은 이들은 노동시장참여보다는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시장 복귀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들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 평균보다 충남의 ‘워킹맘’이 많은 이유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워킹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고용률 자체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자체가 낮아 대졸이상 워킹맘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공공 서비스업 분야로, 충남 지역도 공공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지역 워킹맘들은 전국 평균 대비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전문가/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 워킹맘 비중을 높인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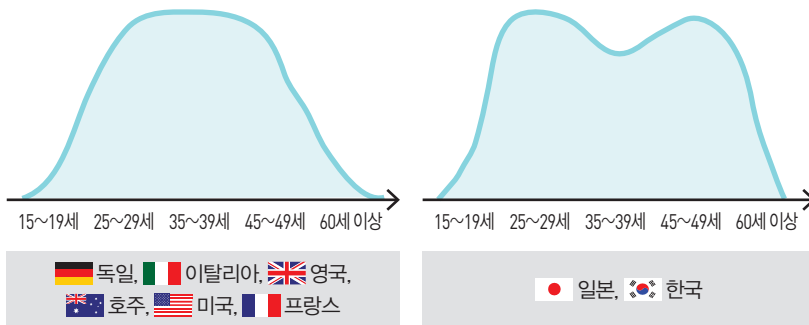
짧게 요약하자면, 충남 지역의 경우 일하는 엄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많긴 하나, 이는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용이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_ 한국노동연구원 최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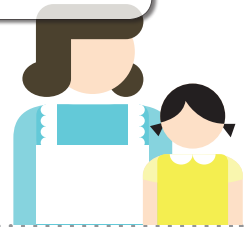
충남의 워킹맘 실태를 진단합니다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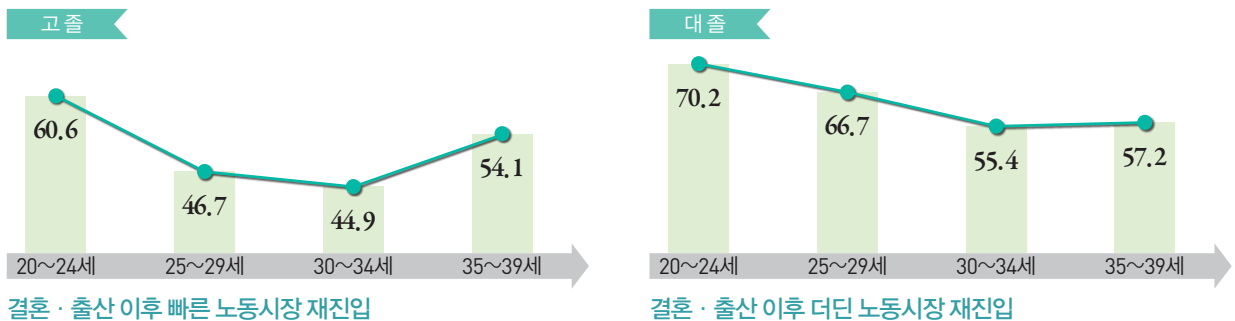


결혼·출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모습(M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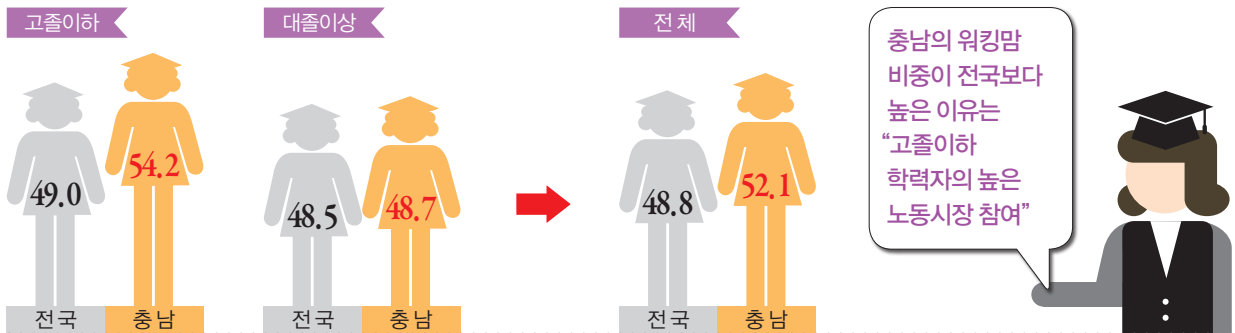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학력별 생애 고용률 변화(1971년생~1975년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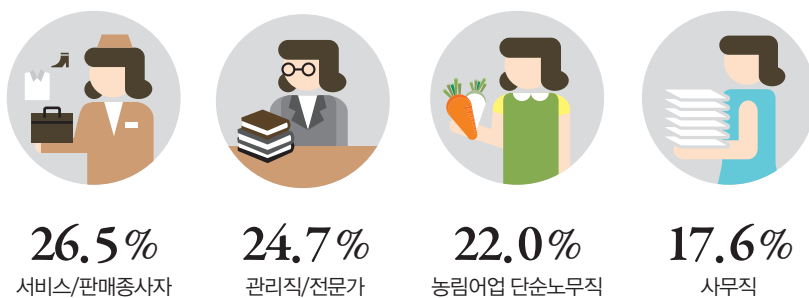


★전국보다 높은 충남의 워킹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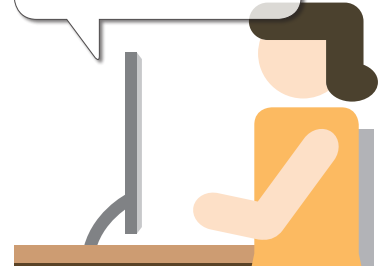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충남의 워킹맘, 무슨일을 할까? (직종별)



전국보다 사무직 비중 ↓
농림어업/
단순노무종사직 비중 ↑



M A R K E T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의 오해와 진실

직장생활을 하는 김씨(여, 34세)는 3년차 맞벌이 부부이다. 평일에는 장보기가 어려워 주로 주말에 장보기를 하는 편이다. 그런데, 매월 2·4주째 일요일은 대형마트나 SSM이 쉬는 곳이 많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정부가 이렇게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충남지역 천안, 아산 등 7곳 대형마트·SSM, 매월 2·4주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실시

당진, 서산, 천안, 공주, 아산, 보령, 계룡 7개 지자체는 현재 의무휴업(매월 2·4주째 일요일)을, 논산, 홍성, 예산, 태안 4개 지자체는 자율휴업(2·4주째 수요일)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2시간 늘어난다. 충남지역은 오는 4월 둘째 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도는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충남지역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형마트·SSM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형마트·SSM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가져올 폐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 집중 현상이 빚어지면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협력업체들은 납품가격 인하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제한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한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형마트 파견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적고, 소비자와 대형마트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규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결국 독자의 몫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들이 있다. 정부의 정책대상은 모두가 해당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규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활동에 반(反)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형마트·SSM 규제도 마찬가지다.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충표



대형마트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알아보기

★ 주요 규제내용



대형마트
의무자율 휴업



영업제한시간 확대
0~8시 → 0~10시



충남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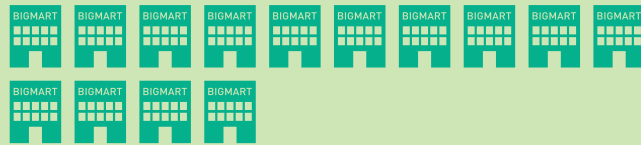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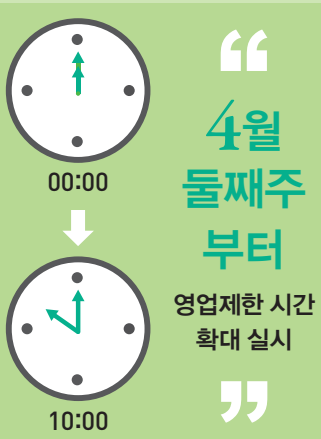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계룡시

매주 2 · 4주째 **일요일 “의무휴업”**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매주 2 · 4주째 **수요일 “자율휴업”**



14
대형마트



39
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 · SSM 규제 찬반 토론

찬성

- ①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② 독과점 구조 우려,
- ③ 과다경쟁-과소비,충동구매 조장
- ④ 과도한 노동시간 감축

↓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 개입

YES VS NO

반대

- ① 소비자 선택권 제한
- ② 파견직 근로자 고용감소
- ③ 대형마트 협력업체 피해

↓
내수경기 위축
소비자 · 대형마트 종사자 피해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와 충남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세의 월세전환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주택임대차 시장 패러다임 전세에서 월세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여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가 발생한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주거의 점유형태 변화를 보면 1990년에 자가의 비중 49.9%에서 2010년 54.2%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세비중은 27.8%에서 21.7%로 6.1% 포인트나 하락하였고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는 2.3%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에서도 나타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2000년 66.1%에서 2010년 61%로 하락, 전세비중도 15.6%에서 15.1%로 소폭 하락하였고, 월세비중은 2000년 13.2%에서 2010년 19%로 상승하였다. 수도권에 비해 자가거주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월세부담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 전국보다 낮은 전세가격 상승, 전국 월세가격은 하락’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변화한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나라 전세가격은 지난 2005년 말에서 2014년 2월말까지 약 10년 기간 동안 51% 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국평균보다 더 높은 61.4%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충남은 같은 기간 38.4%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충남지역이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진 광역도인 만큼 천안, 아산시 등 도시지역과 개발재료가 많아 전세수요가 많은 서산 당진지역, 그리고 세종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여타 충남의 지역은 전세시장이 매우 안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택전세가격의 변동률을 분석하면 서울의 전세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충남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월세가격은 어떠했을까? 전세가격이 최근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2013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월세가격의 하락원인은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지속에 따른 초과공급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저금리 기초의 장기화와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인해 향후 월세가격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월세통계 작성되지 않아 향후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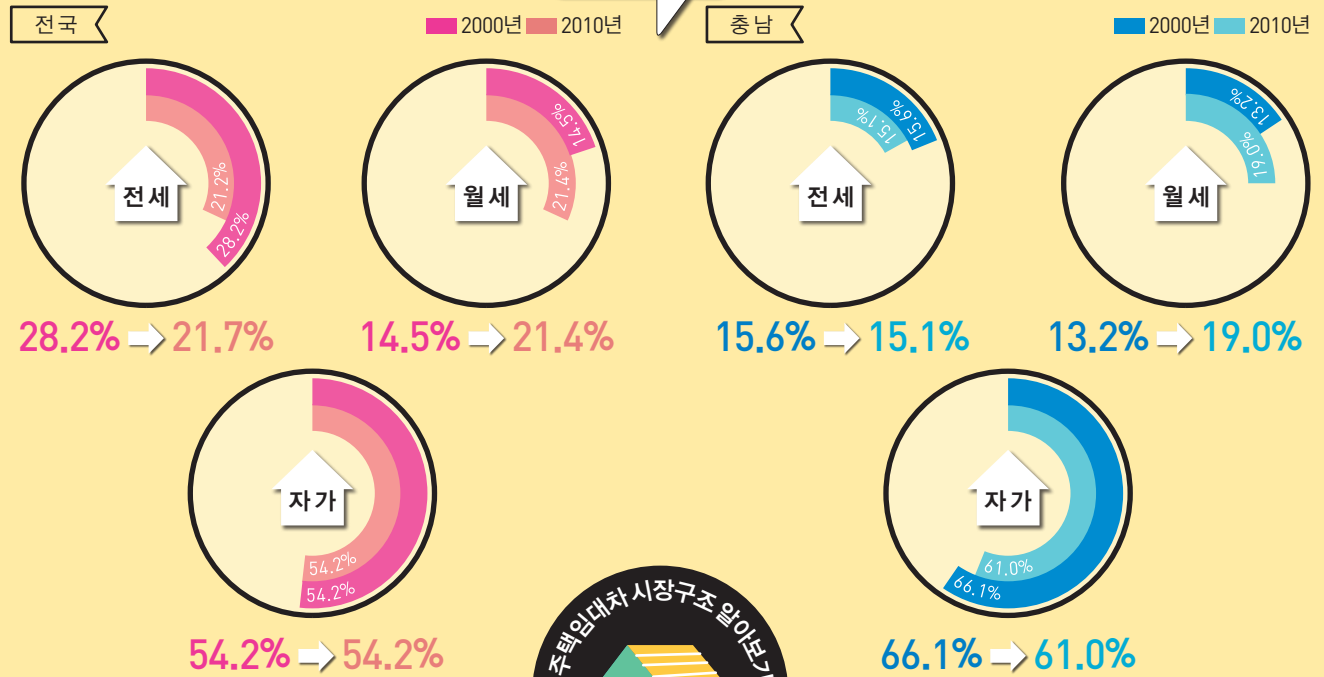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는 아직 월세시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남지역의 월세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도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맞닿아 있는 만큼 향후 빠른 시일내에 월세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주택임대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비해 자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덜 하다고 하나,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자가비율이 낮으므로 전월세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저자 _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상학

주택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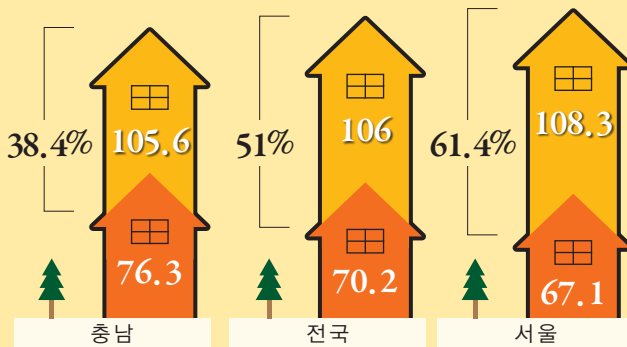
전세 → 월세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전세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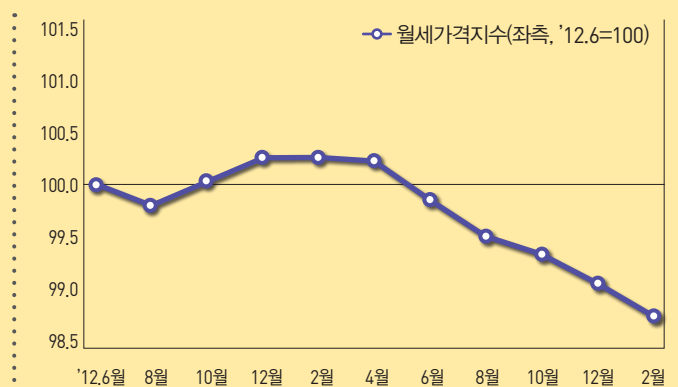
2005년 2014년 2월



※KB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2012.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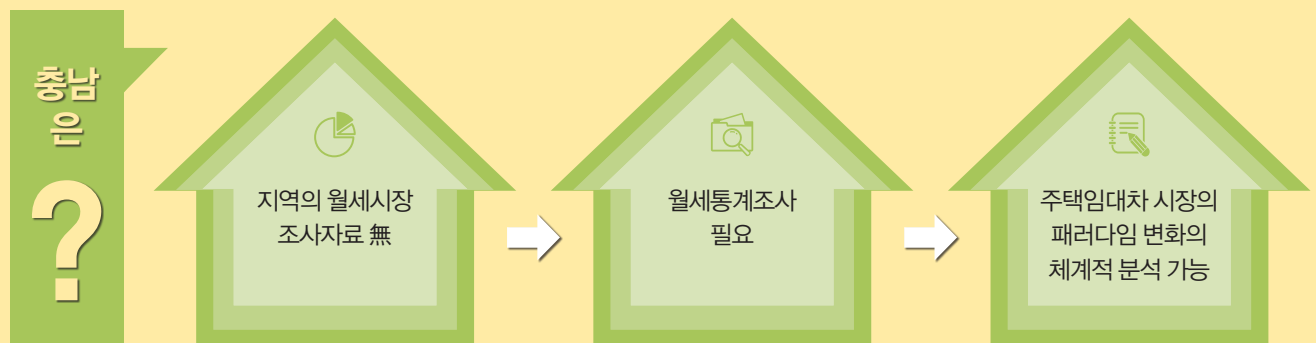
전국 월세가격의 변화

※한국감정원, 월세가격동향조사



충남의 전세가격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 월세가격 하락

충남의 향후 과제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라

고령화 대응력지수가 뭐지?

급속한 고령화현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됐다.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저하와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지역성장 및 지역 발전은 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모든 지자체들은 이를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지역이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구구조, 즉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인간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2~3주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2~3일 후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영향도 있겠지만 평소 운동이나 음식 섭취 등을 통해 감기에 대응하는 길항력이 자신도 모르게 축적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력도 이와 같은 이치다. 예컨대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그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지자체는 생산성의 감소분을 상쇄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 증가 또는 기술혁신(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투입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나타나는 정책투입에 대한 성과는 모두 고령화 대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고는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즉 정책투입)를 경제, 산업, 보건, 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령화대응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충남, 고령화 수준 높지만 노화(老)는 가장 늦은 인구구조

충남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16.1%로 이미 고령지역(7~14% 미만)으로 진입했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생산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충남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노인층의 부양을 위한 지출 증대로 복지에산의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 이 수치로만 보면 충남의 장래는 우울하다.

그러나 고령화 수준이 아닌 진행 속도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충남의 늙어가는 속도(노화현상)는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충남이 한 살을 먹을 때 충남 보다 젊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다. 즉, 1993~2013년 동안 고령화 비중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 2.2배, 부산 3.3배, 서울 2.8배 늘어난 반면, 충남은 1.8배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인구 연령층이 충남으로 유입되어 인구구조 노화현상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충남의 인구구조상으로 볼 때 불행 중 다행이다.

충남, 고령화 대응력 전국 2위...부문 간 불균형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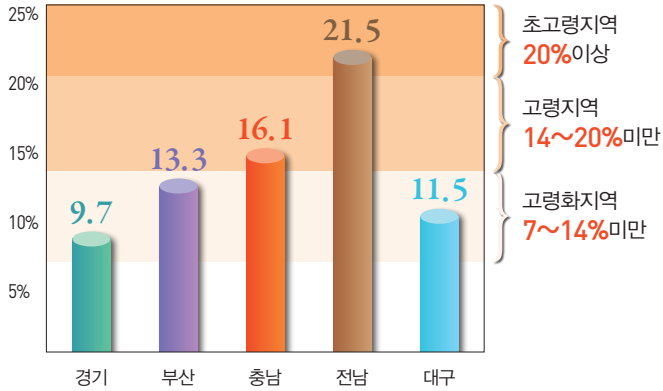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4.20으로 경기(4.38)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3.78) 3위, 대전(3.57) 5위를 차지하여 충청권 3개 지역은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유형은 경제(경제·산업) 및 생활(보건·복지) 활력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활력 지역으로 분류되어 높은 고령화대응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부문 간 불균형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낸다. 즉, 경제 활력 지수는 3.0으로 전국 1위이나, 생활 활력 지수는 1.20으로 7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는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했으나, 보건 및 복지 영역은 6위와 7위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제조업의 집적에 따른 활발한 생산활동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보건 및 복지 영역을 대변하는 생활 측면에서의 정책 투입에 대한 미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이 고령화대응력을 더욱 제고하려면 생활활력의 근본적인 요인인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창의 인재육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저자 _ 산업연구원 허문규

지역별 고령화율과 진행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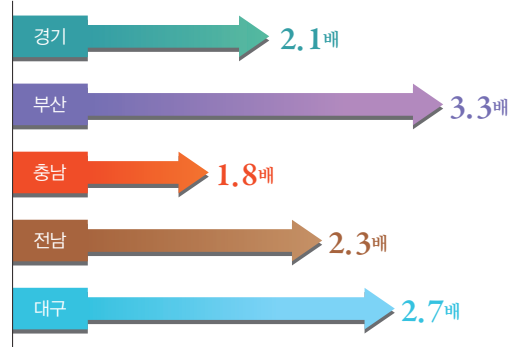
고령화율, 2013



고령화 비율은
높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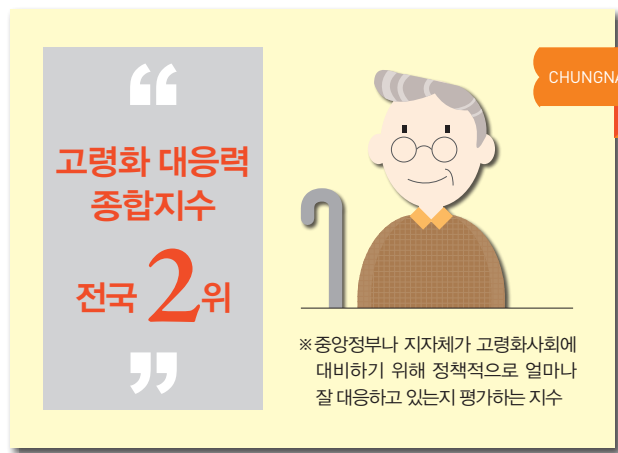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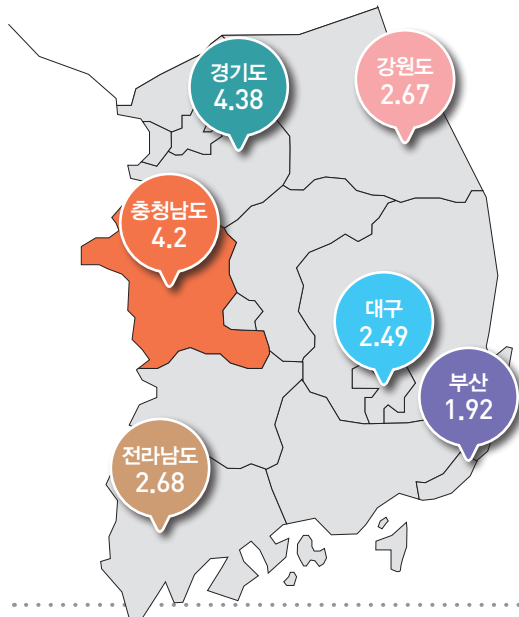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최근 20년간 고령화 진행속도, 199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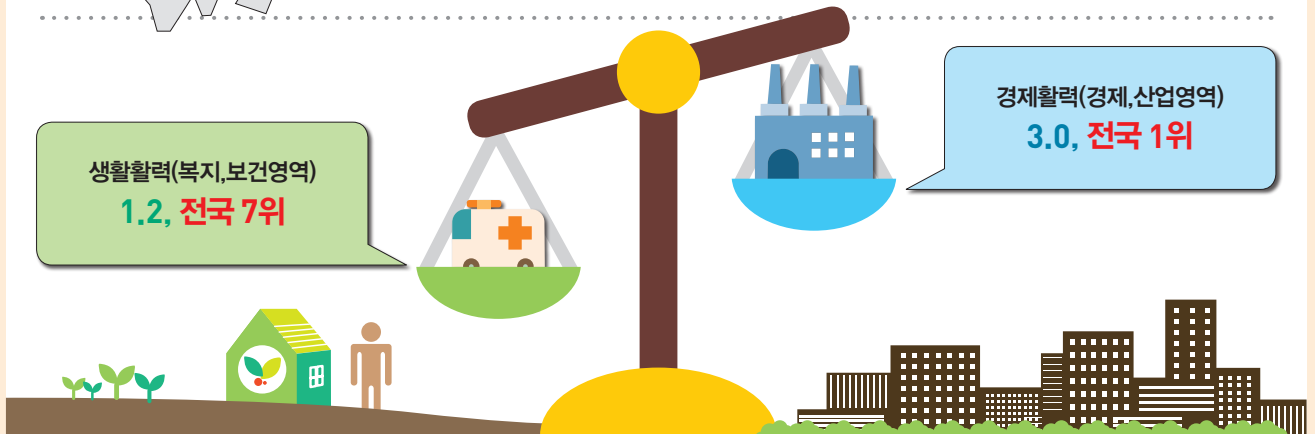
충남의 고령화 대응력

※자료 : 산업연구원



생활활력(복지,보건영역)
1.2, 전국 7위

경제활력(경제,산업영역)
3.0, 전국 1위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본 충남지역 기업경기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최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 3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가 83으로 전월(76)보다 7p 상승하였으며, 4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도 88로 전월(81)보다 7p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 일간지는 “지역 제조업 4월 경기 전망 ‘好好’”라고 보도하여 경기회복 분위기를 북돋았다. 그러나 다른 일간지는 “대전·충남 제조업 체감경기 아직도 썰렁”이라고 보도하였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무엇인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액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가령 통계청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생산액을 집계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1년 전의 수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이며 동 지수는 0~200의 값을 갖는다. 동 지수가 100을 넘어서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수에 비해 많음을,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00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응답에 하향편의가 있음을 반영하므로 해석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2014년 3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동향 : 개선

업황BSI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후 조사 기업의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 지수화한 것이다. 2014년 3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BSI를 보면 84로 전월(77)보다 7p 상승하였다. 통상 지수가 100이면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업황BSI 84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업체 수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지역 기업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기가 좋았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수가 100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충남지역 기업경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수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수치, 즉 전월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남지역 제조업의 어려움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도 업황BSI가 전월보다 5p 상승(69→74)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서는 아직 호전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충남지역 기업경기 전망 : 호전

기업가에게 다음 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산출한 것이 업황전망BSI다. 4월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89로 전월(82)보다 7p 상승하였다. 다음 달 기업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4)은 전월보다 14p, 중소기업(91)은 5p 각각 상승하여 대기업의 호전 폭이 더 컸다. 한편 충남지역 비제조업의 4월 업황전망BSI는 75로 전월(74)보다 1p 상승에 머물렀다. 제조업에 비해 경기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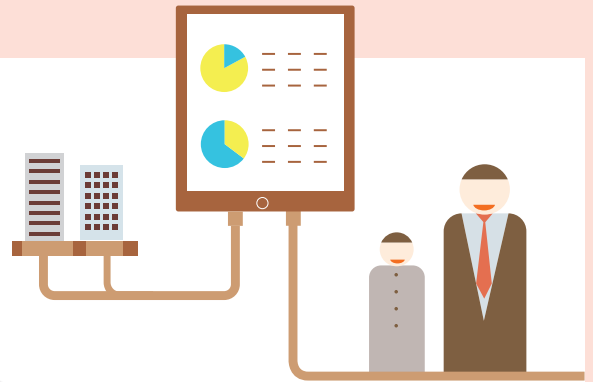
2014년 3월 경영애로사항 : 감소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사항의 경우는 자료사정상 대전과 충남을 함께 설명한다. 금년 3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2.5%), 불확실한 경제상황(11.9%), 수출부진(11.9%) 등을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달과 비교하여 보면 내수부진은 다소 줄어든(-2.9%p) 반면 경영애로가 없다는 응답 비중은 상당히 늘어(+4.8%p)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응답 비중도 높아져(+3.0%p) 영업 여건의 어려움도 아울러 보여 주었다.

저자 _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박창귀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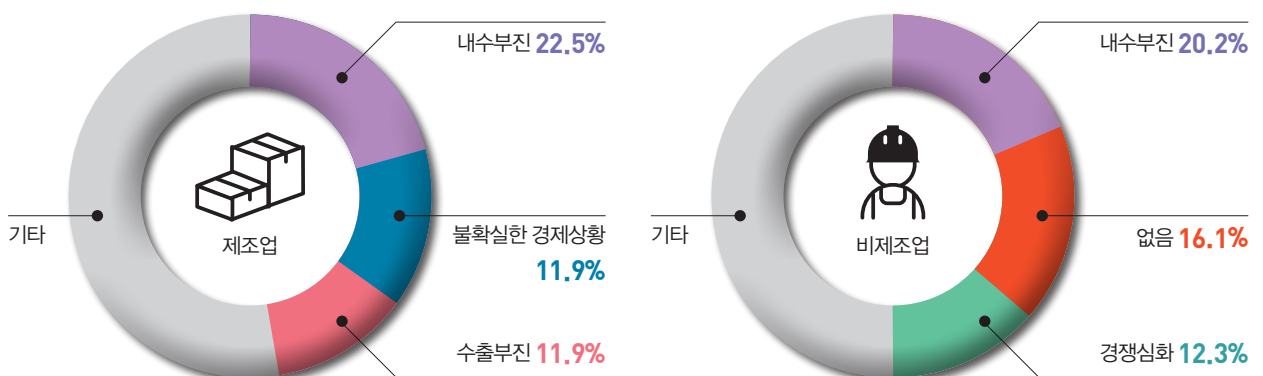
경기예측 방법의 하나로서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하여 그 응답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



❓ 충남의 BSI 실적과 전망



❓ 대전 · 충남지역 주요 기업애로사항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 자치재정 확립하자

‘지방자치 · 분권은 돈먹는 하마?’

1961년 5·16 이후 정치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부활하였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식적인 모양새는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당시 ‘80:20’ 이던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비율은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지방자치와 분권은 마치 ‘돈먹는 하마’처럼 인식되어 지방재정의 낭비와 누수현상이 마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문제인 듯 비추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운영의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의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력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지방분권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재정분권 수준이 낮아,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남, 전국평균보다 낮은 재정자립도’

세입은 국세:지방세=80:20 이나 세출은 대략 중앙정부:지방정부=43:57로(교육재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 80:20), 지자체에서는 자체세수와 지출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그 격차를 중앙정부가 재정이전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중앙-지방간의 세입·세출 역전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격차의 크기 및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OECD 국가내에서도 큰 편이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991년 66.4%였던 중앙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최고점(69.6%)에 달한 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45.0%까지 낮아졌다. 충남의 경우, 2000년 32.2%였던 재정자립도(충남 평균)가 올해 30.2%까지 하락한 상태인데, 재정자립도는 도→시→군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놀라운 점은, GRDP는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충남이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시도 중 11위로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충남의 15개 시군 중, 4개시(천안·아산·당진·서산)를 제외한 시군이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국세세원은 소득·소비과세 중심, 지방세세원은 재산과세 중심인 구조라는 것에 기인한다. 즉, 경제성장·소득수준 향상이 지방세 세수증대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위축은 지방세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관련사업의 확대추세도 재정압박의 요인이다. 국고보조사업 매칭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특히 기초지자체에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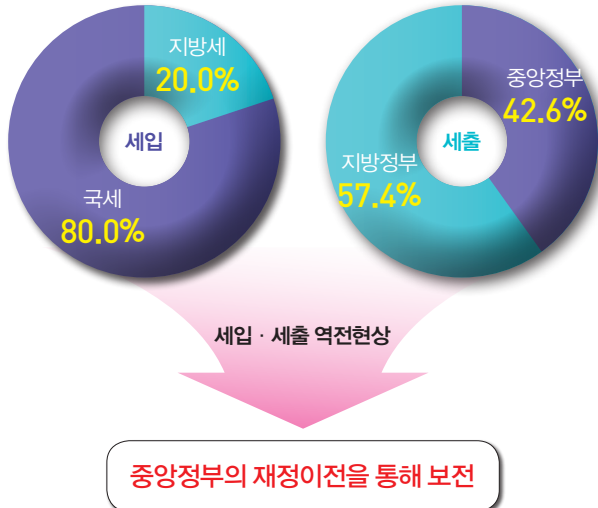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이라는 큰 흐름에 대응할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의 위기가 지방재정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합리화 및 세입노력 확대가 필요하다. 자주재정권 확충을 위해, 현행 국고보조금의 축소·정리,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추가 이양, 지방교부세 조정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세원이양, 신(新)세목 신설 등을 통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설정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주민의 책임성 제고노력을 통한 재정지출수요에 대한 주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의식함양 및 합의도출 등의 과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여 예산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용체제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자율-참여-책임이 구현되는 분권형 자치재정체제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자치재정은 우리지역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주체적이고 내발적(Endogenous)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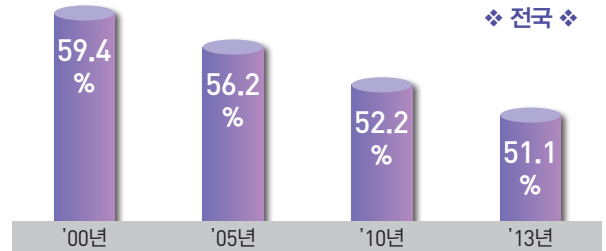
지방재정 구조와 경기와의 관계 알아보기

세입 · 세출 구조와 낮아지는 충남의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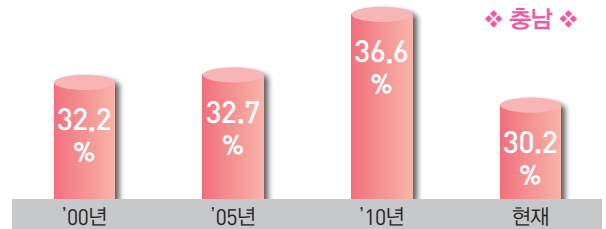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 추이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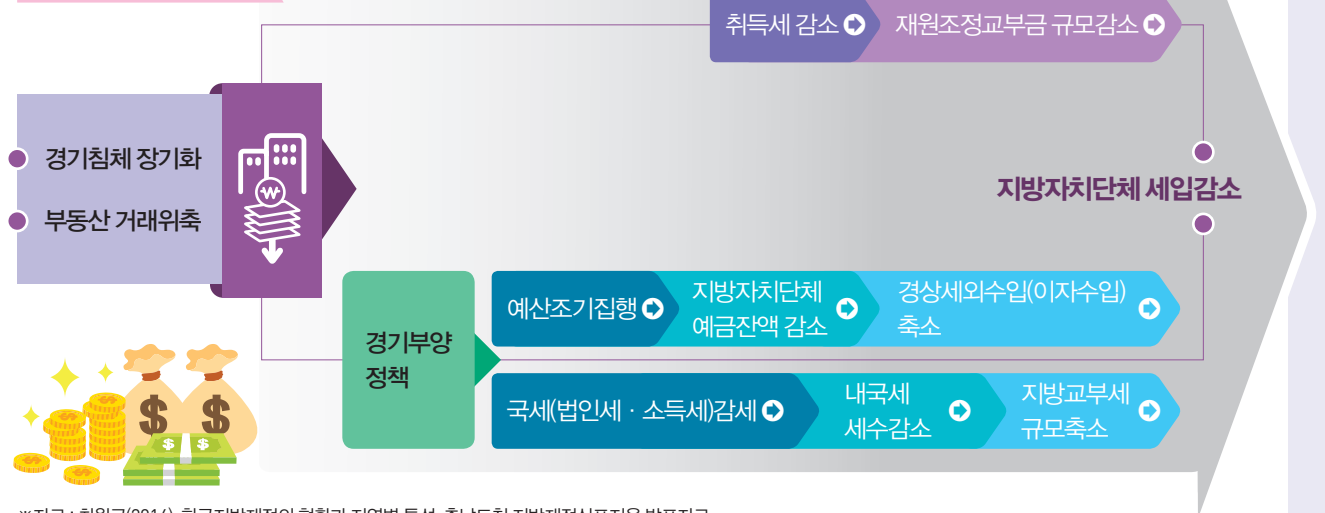
※자료 : 재정고

점점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의 원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경기와 지방재정의 관계



※자료 : 최원구(2014), 한국지방재정의 현황과 지역별 특성, 충남도청 지방재정심포지움 발표자료

충남지역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현황과 특징

‘최근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취업자가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 서비스들이 시장화되며 사회적 인프라로 확장되었고,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2004년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4년 17.5%에서 2013년 26.5%로 크게 증가해 여성 취업자의 1/4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업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5.1% 까지 증가해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가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한편, 여성 취업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업의 고용수준을 EU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주로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40~50%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여성 고용률 수준도 상당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사회서비스업의 특징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여성참여 증대는 여성 고용률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여성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충남 지역 사회서비스업, 어떤 특성을 가졌나?’

그런데, 충남 지역의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 다르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충남지역의 경우 여성 취업자의 18.8%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제조업에 15.0% 종사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사회서비스업에 고령층이 많은 영향으로 평균 연령도 전국평균(40세)보다 높은 42세고 고졸이하의 학력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에 근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_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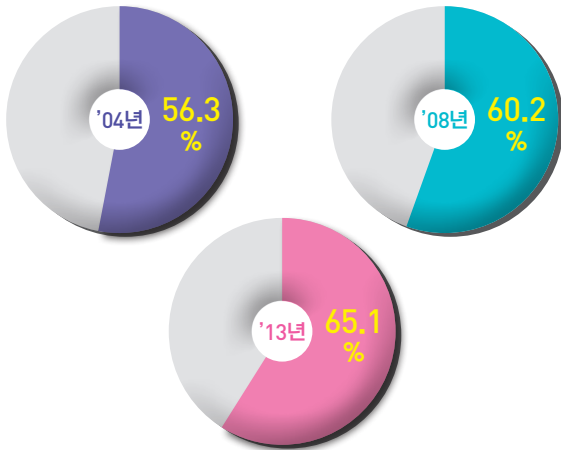


충남지역 여성사회서비스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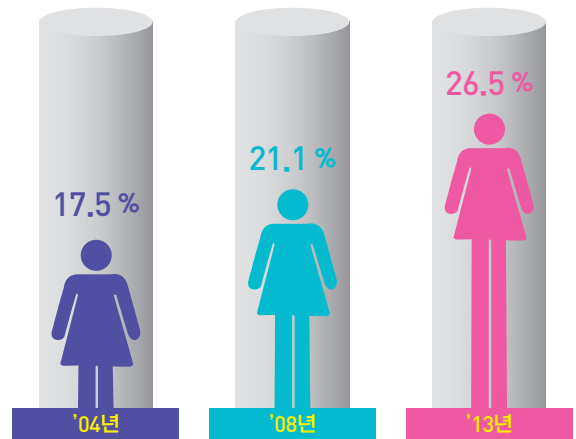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 진행 중 (전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사회서비스업 중 여성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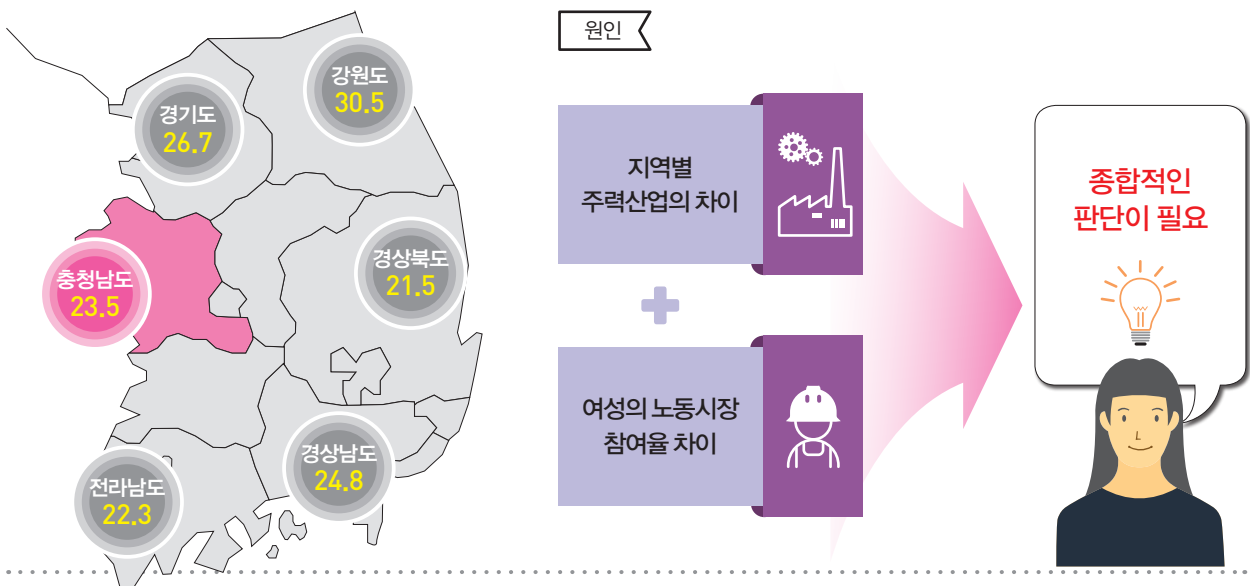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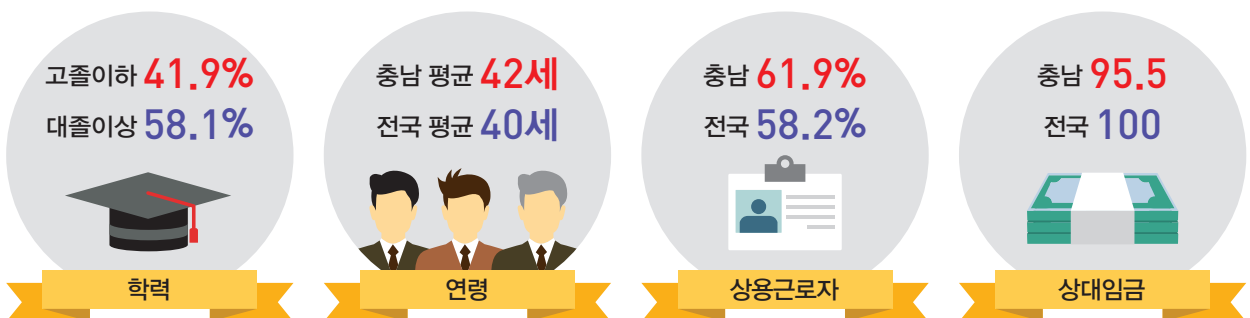


충남지역 여성 취업자의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 그 이유는?

※자료 : 통계청, 2012년 3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충남지역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FTA,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수출·입하는 물품은 FTA 수혜 품목인가?’

최근 대외거래의 흐름은 단연 FTA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FT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도 FTA 체결되었으니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을 막연하게 바라고 있을 뿐 구체적인 활용 로드맵을 알고 있는 일반인은 드물 것이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FTA 협정별로 그리고 물품별(HS CODE기준)로 FTA 관세 인하 혜택이 상이하다. 그렇다면, 내가 수출·입하는 물품이 FTA 수혜 품목인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FTA협정문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문을 일일이 찾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FTA 수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한 우리는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FTA포털에 접속하여 MY메뉴-수출세율 또는 수입세율을 클릭하고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또는 품목명을 검색하면, 수출·입국가의 기본세율과 FTA세율이 조회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FTA효과를 알고자 할 때 단순히 관세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관세 외에 부가세, 주세, 교통세 등 다양한 내국세 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만약 미국에서 관세가 8%인 100만원짜리 물건을 수입하여 FTA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관세(8만원)+부가가치세(10만원+8천원)가 부여되어 18.8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 이유는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물품 가격+관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8%와 관세의 부가가치세0.8%의 세금이 절감되어 총 8.8만원 8.8%의 세금이 절감되는 것이다. 바로 관세와 내국세가 함께 절감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부과되는데 MPF는 송장금액×0.21%로 최소 USD 25 최대 USD 485가 부과된다. 한-미 FTA 적용시 MPF 부과가 면제됨으로 이 또한 FTA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이다.

‘특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 해준다. 따라서, 수입국의 세금이 줄어들므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FTA 협정 관세가 적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검증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이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많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을 보면, 수입검증은 지난해 251건이었던 것이 올 4월까지 246건으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TA 특혜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그 특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수출·입 업체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도 가지는 것이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주요체크포인트로는 ①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② 유효기간 경과 여부 ③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④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⑤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⑥ 우선 순위별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⑦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⑧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⑨ 운송요건 충족 여부 ⑩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 있으니 주의하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 확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EU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 수출자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 또는 EUR1의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입자의 입장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접속 ⇨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언어변경(ENGLISH) ⇨ Approved Exporter를 클릭 ⇨ 공란에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 입력 확인

만약 NO DATA라고 뜨면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된 것임으로 수입시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안된다.

저자_충남FTA활용지원센터 남성철

1) 한-EU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 및 제16조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FTA,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나라 FTA 체결 한 눈에 보기(발효)

※자료 : 관세청



칠레
(‘04.4.1)



싱가포르
(‘06.3.2)



EFTA
(‘06.9.1)



아세안
(‘07.6.1
~‘10.1.1)



인도
(‘10.1.1)



EU
(‘11.7.1)



페루
(‘11.8.1)



미국
(‘12.3.15)



터키
(‘13.5.1)

FTA 수혜품목 확인하기

FTA
수혜대상
인가?

• 관세청 FTA 포털 접속
(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 MY 메뉴에서 수출
또는 수입세율 선택

• HS CODE 입력
(ex. 8703241010)
• 품목명 입력
(ex. 승용자동차)

수·출입
FTA별
세율확인

FTA 세율인하효과 알아보기

예제로 알아보기

미국산
100만원짜리 상품

• 기본세율 8%
→ • FTA세율 0%



관세 8만원 + 부가가치세 8천원
총 8만 8천원 세금 절감



특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 입증

: 원산지 검정 관련 체크 포인트

- | | |
|-----------------------------|-----------------------------|
| ①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⑥ 우선 순위별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 ② 유효기간 경과 여부 | ⑦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 ③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⑧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 ④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⑨ 운송요건 충족 여부 |
| ⑤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⑩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



수입할 때는 인증수출자 검정은 필수!

인증
수출자
유효성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www.customs.go.kr)
• 언어변경 : ENGLISH

• 우측하단에 Approved
Exporter 클릭

•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입력

• NO DATA이면 FTA특혜관세
신청 불가



충남의 전국 수출 1위 품목으로 본 수출경쟁력

충남의 전국수출 1위 품목수는 몇 개이고 전국 순위는?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순위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한 전체 품목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4,643개(HS 6단위), 2013년에는 전년대비 42개 증가한 4,685개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12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2011년의 61개에서 소폭 증가한 64개로 집계됐다. 세계 순위도 전년 15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14위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1,485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독일(2위, 703개), 미국(3위, 603개), 일본(4위, 231개) 등의 순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충남, 수출규모 전국 3위이나 수출 1위 품목 수는 170개로 8위에 불과

반면, 충남의 수출 1위 품목 수는 2011년 183개, 2012년 182개, 2013년 170개로 점차 감소했다. 충남은 수출품목 170개 품목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위 품목 보유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8위를 기록했다. 충남의 지역별 수출액 순위와 수출 1위 품목 보유 순위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2013년 충남의 수출액은 651.9억 달러로 우리나라 지역 중 수출액 기준 3위(전체 수출액 대비 11.6%)를 차지하였으나 수출 1위 품목 보유수 기준으로는 순위 8위(수출 1위 품목 4,685개 중 3.6%)에 그쳤다. 반대로 수출 1위 품목 최다 보유 지역인 서울은 수출액 기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전체 4,686개 품목 중 서울은 1,421개 품목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지역 중 수출 1위 품목 수 최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품목 수출액은 전국 4위, IT 제품 등 수출 집중도 높아

2013년 충남의 수출 1위 170개 품목의 수출액은 351억 달러로 전체 충남 수출액 652억 달러 대비 절반 이상(53.8%)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수출 1위 품목의 금액 합계는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의 전국 수출 1위 (금액 기준) 10대 품목 가운데 노트북, PC 모니터, TV, 모바일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바이스(HS 90138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 854231) 등 IT 제품이 6대 품목에 해당하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264.4억 달러로 충남 전체 수출의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기화합물(33.5억 달러로 5.1% 차지), 자동차 부품(15.0억 달러, 2.3%), 플라스틱(6.7억 달러, 1.0%)이 그 뒤를 이었다.

혁신을 통한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로 수출 1위 품목 육성해야

충남은 수출 규모면에서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에서 8위에 그쳐 일부 주력품목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충남의 1~5위 품목 가운데 차순위로 갈수록 품목 수가 많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순위별 비중 또한 높다. 따라서 아직 수출 1위 품목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쟁국 및 경쟁기업과의 가격 위주 경쟁에서 탈피하여 혁신을 통한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 중 충남이 1위하는 품목은 뭘까요?

충남의 1위 수출품목이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 수 : 4,600여개 (HS코드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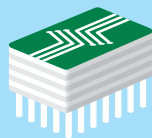
충남의 수출규모는 성장하고 있어요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 1위를 알아 볼까요?



액정디바이스
101억달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81억달러



컴퓨터 기억장치
22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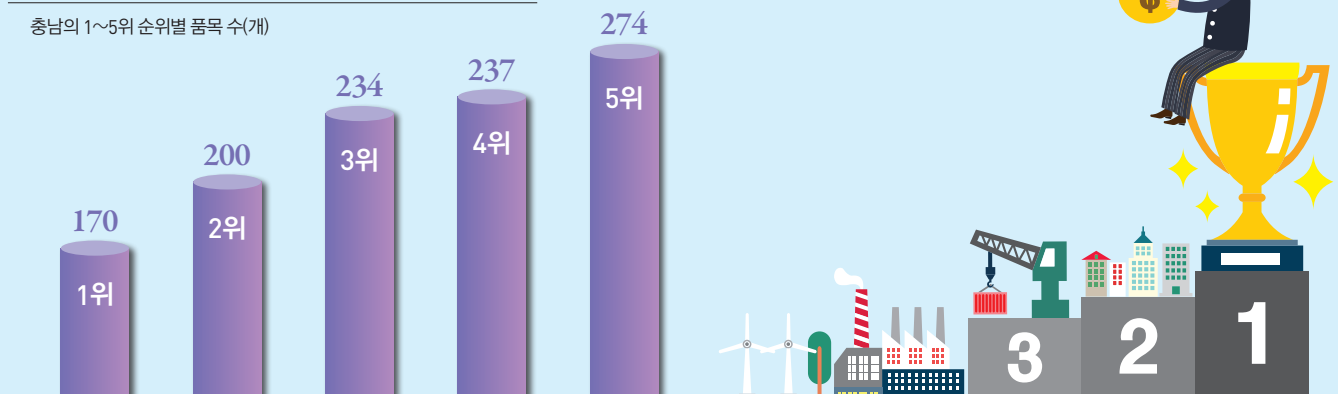


자동차 기어박스
15억달러

※지역 주력산업에 집중된 수출 품목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로 수출 1위 품목 육성해오

충남의 1~5위 순위별 품목 수(개)



중국 내수 식품시장의 성장과 충남 식품산업의 기회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중국 가공식품시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계의 소비 지출은 GDP 성장을 크게 상회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다. 향상된 소득 수준에 힘입어 가계의 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수 소비의 경제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낮은 가계 소비 지출 수준은 향후 이 부분의 성장을 짐작케 하는 주요 근거이며, 중국 정부가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내수 강화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꺼내는 가장 큰 이유이다. 약 1,03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중국 식품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 식품시장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인 상황이다. 통상 선진국의 경우, 이 비중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은 가공식품 소비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가공식품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아직까지 기대에 미흡한 한국 식품, 그러나 성장 잠재력은 풍부’

2012년 현재, 우리 가공식품의 對중국 수출 규모는 약 6억 달러 수준으로 과자 및 베이커리, 커피조제품, 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수입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이 안전하고, 맛이 좋으며, 디자인이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식품 구매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최근 중국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은 일부 품목별로 한국 식품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지닌 강점이 제품의 외관적인 측면에 머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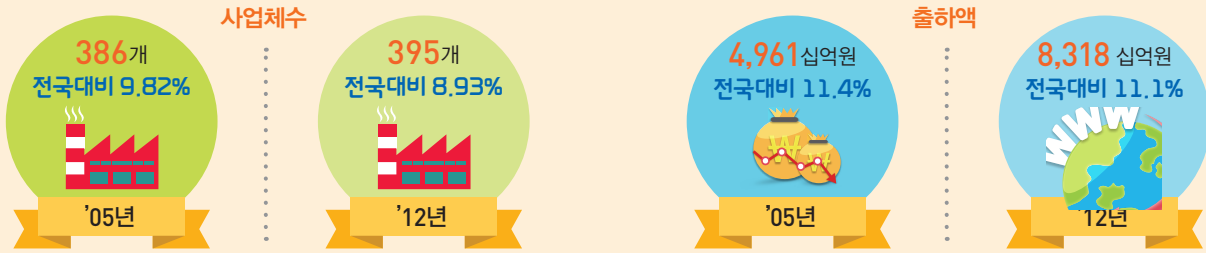
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식품은 지리적 인접성, 한국 문화 및 식품에 대한 친화성, 최근의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 여타 글로벌 식품기업들과 차별화 된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식품의 위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식품을 대표할 시장과 제품군,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중 수출 전략으로 충남 식품산업의 성장 돌파구를 모색해야’

국내 식품산업에서 충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 추세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 지역에 소재한 식품 기업체들은 다른 시·도의 식품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특징도 지니고 있어 성장 활로를 찾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식품시장 환경에서 근거리에 입지한 중국의 거대 식품시장은 우리 식품산업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며,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식품산업 여건을 갖춘 충남에 있어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식품시장은 기초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기업에게 매우 어려운 시장이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식품기업이 감당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시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중앙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토대로 충남 지역 식품산업의 특성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충남 지역 내 여러 세부 식품산업 중 현재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또한 잘 할 수 있는 특화 상품군이나 영역을 발굴하고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충남 식품의 중국 내 수용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 식품산업의 성장동력, 중국을 향해 싸라

정체기인 충남의 식품산업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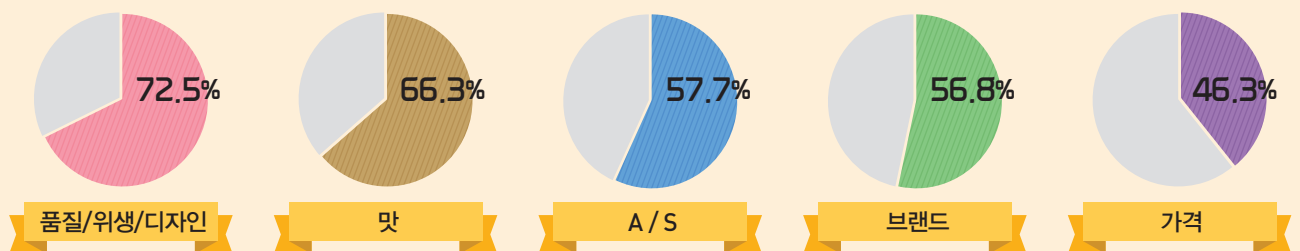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3)

중국의 폭풍성장을 잡아라.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2012)
최근3년간성장률

자료 : 만족비율, 박기임(2012)



“선택과 집중” 대중 수출 전략 모색하기



충남의 가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충남의 일자리 창출, 가젤산업부터 파악해라

‘창조경제에서 가젤산업은 어떤 역할을 하지?’

새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국정의 화두로 등장하였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최종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내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높은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많이 창업하거나 혹은 유치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을 가젤기업(gazelle firms)이라 하고, 이런 기업들이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가젤산업(gazelle industries)이라 한다. Acs 등 기존의 많은 이론 연구에 의하면, 고용창출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대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닌 중규모의 가젤기업이었으며, 이런 기업들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젤기업과 유사하게 각 지역에는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가젤산업군이 있으며, 이러한 가젤기업과 가젤산업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지역 내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가젤산업, 경쟁력은 양호하나 육성에서 누락된 산업 많아’

Birch 지수를 이용하여 충남의 가젤산업을 도출한 결과, 105개 업종이 선정되었다. 동 산업군을 대상으로 충남의 시·군별 가젤산업 집적지를 분석한 결과, 도내 제조업 관련 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는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순으로 나타나, 충남의 경우 강한 제조업 집적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이 일치하였다. 반면, 가젤산업이 가장 적게 집적된 지역은 청양시, 계룡시, 보령시, 태안군, 부여시, 예산군 등 농어촌지역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충남 가젤산업의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105개 업종중 71개(67.6%)업종이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양호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기술기반업종 71개를 다시 세분한 결과, 첨단기술은 12개(16.9%), 고기술은 29개(40.8%), 중기술은 24개(33.8%), 저기술은 6개(8.5%)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가젤산업은 특허도는 '06년에 1.20에서 '11년에 1.54로 높아져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충남

의 가젤산업은 지역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으면서 이 기간 동안 특허도가 0.34 증가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충남의 가젤산업으로 선정된 105개 세세분류 업종중, 충남의 현재 지역산업정책 육성대상 산업군에는 전체 가젤기업군 중 1/3수준인 31개만 포함되어 74개가 육성대상 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주요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주력기간제조업에 19개의 가젤산업이 있으며 그 중 11개가 육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제조업에 22개의 가젤산업이 있으나 9개가 육성되지 않고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개 중 7개, 뿌리산업은 16개 중 11개 등 38개가 육성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향후 건강·휴양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업이나 향후 육성을 검토할만한 제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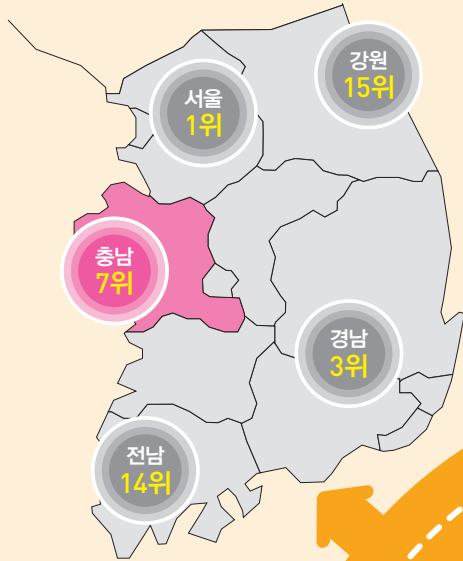
‘충남, 시·도별 특성을 감안한 가젤산업 육성 필요’

앞으로 충남은 신지역특화산업을 비롯한 여러 국책사업에서 제외된 가젤산업을 재검점하여 육성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 가젤산업 중 KSIC 세분류 105개가 다소 많은 수도 있으므로, 더 엄밀한 검토를 거쳐 일자리 창출 정도가 우수한 ‘핵심 가젤산업군’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가젤산업에 속한 가젤기업군을 발굴하여 정부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내 역량을 모아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남에서도 ‘가젤산업 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신규 출범시킴으로써, 충남의 육성대상 가젤산업군에 속한 가젤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충남 가젤산업 분포 하위 지역들의 특징은 농산어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충남도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결합 시키거나, 농산어업의 제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서는 이들 지역의 창업 및 고용감소의 원인파악과 중소 농촌지역의 입지여건 개선을 통한 가젤기업 유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정홍, 한국정책연구소 김대중

충남의 고성장, 가젤산업을 파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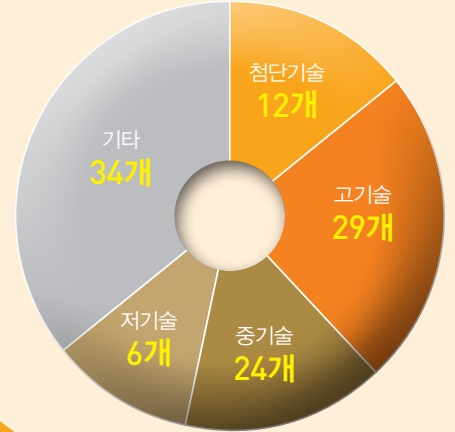
전국 16개시도 중 7번째로 가젤기업이 많은 충남!



충남 가젤기업 수	284개 (전국 7위)
도내 전체기업 대비 가젤기업 비중	9.7% (전국 4위)

자료: 김정홍(2013),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충남의 가젤산업 105개 업종 중
71개는 기술기반업종으로
경쟁력 UP



가젤기업과 가젤산업의 정의

- + 가젤은 달리는 속도가 빠르고 점프력이 좋으며 새끼도 많이 낳아 10~30마리가 한 가족을 구성한다는 ‘영양(羚羊)’의 일종으로, 가젤 기업은 일자리 창출 정도가 우수한 기업을 의미
-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06년~’11년) Birch 고용성장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산업

제조업 집적지에
집중된 가젤산업



핵심 가젤산업군 선정 및 육성

- 105개 업종 중 핵심 업종을 선정 및 육성
- 지역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농산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결합
- 농산어업의 제조업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
- 중소 농촌지역의 입지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주력

주요산업정책에서 제외된 가젤산업 다수 존재

- 충남의 지역산업정책 육성대상 중 74개 업종이 제외
- 주력기반제조업 19개 중 11개 업종 제외
- 지식기반제조업 22개 중 9개 업종 제외
- 지식기반서비스업 10개 중 7개 업종 제외
- 뿌리산업 16개 중 11개 업종 제외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한가?’

그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시장경제의 영역이 아닌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공공주도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제·지원주체·지원사업이 복잡·다기화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지원은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측면에서 분절화문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나아가 정부부처·지원영역·지원기관별로 추진되는 부문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은 예산낭비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내 여러 지원사업간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조정·연계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방식(arca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지원법제계상 지원기관간 물리적 또는 완전통합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한 범위 내 조정과 연계를 지역 내부적으로 가능케 하는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는 첫째, 현행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부분을 분리·별도 제정하고 아울러 유명무실한 동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유시책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획·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정책개발 시 상호간 원활한 공조를 법제로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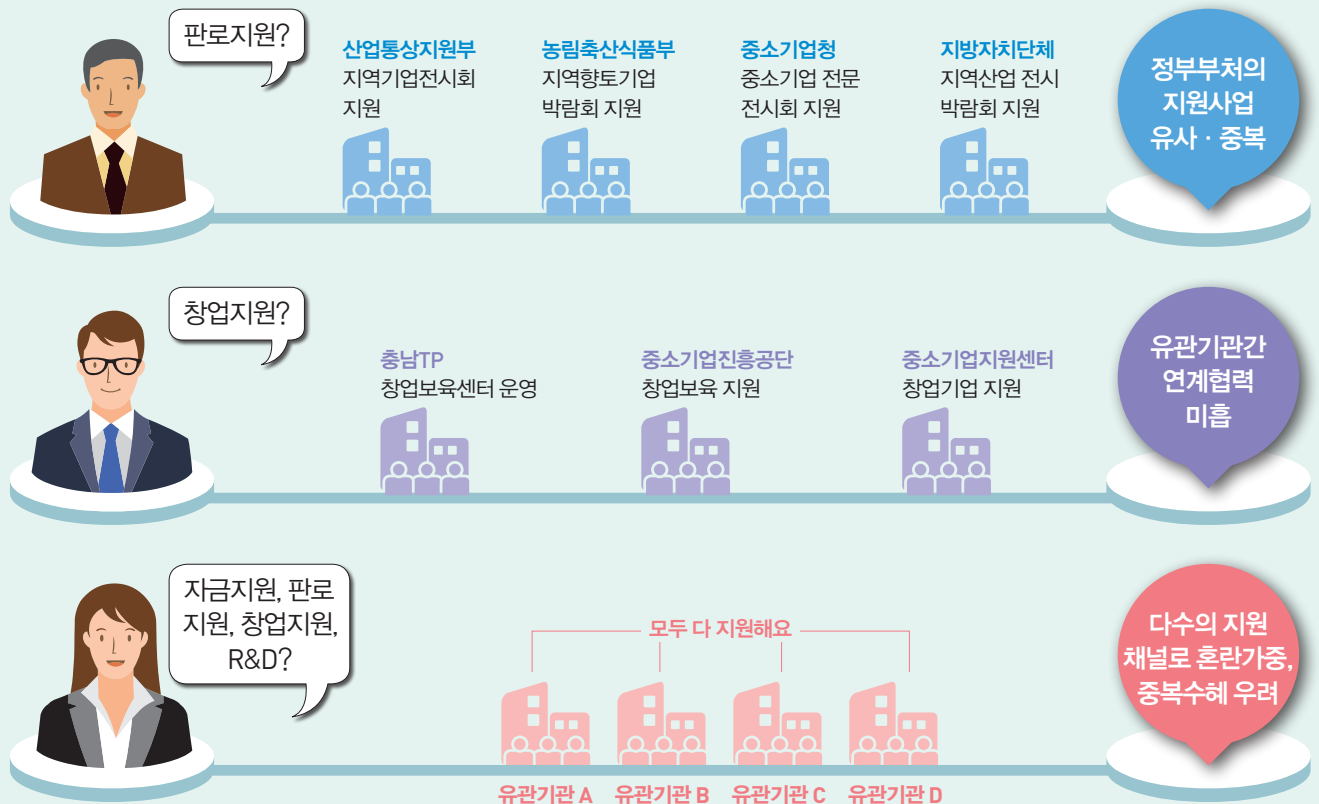
지원기구’를 지역에 설치토록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일정비율을 광역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예산배분 방식(top-down)에서 실링제(ceiling) 또는 포괄보조금제(block grants)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 이니셔티브(regional initiative)가 취약한 절차유형(procedural type)의 거버넌스 형태에서 지원주체간 협력관계, 권한위임, 신뢰 등을 토대로 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형(network type)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거나 지역단위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기관들의 수행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성과미흡 시 예산 및 사업을 사전조정 해야 한다. 셋째, 중앙부처가 수립한 시책의 범위 내에서 충남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동 플랫폼에는 지원상담을 위한 단일창구(single window)기능과 도내 여타 지원기관을 탐색·알선해주는 중개(brokering)기능을 장착토록 한다.

끝으로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원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기관은 동 플랫폼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컨설턴트, 조사인력, DB구축 및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업지원 플랫폼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지원서비스 공급기관(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관사업 연계수행, 정보공유, 지원사업정보 DB화 및 기관간 네트워크 등을 추진토록 한다.

혼란스러운 지원정책?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 정책은 하난데 지원은 여러 곳에서?, 어? 여기저기 비슷한 지원정책이 많군!!



★이렇게 바꾸어 봐요



충남 철강산업의 내일을 위한 준비

저자 _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기반산업’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철강공업육성법(1970~1986)에 힘입어 일관제철소 건설을 필두로 철강산업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철강생산은 1973년 약 50만톤 수준이었으나 포스코의 포항제철이 완공되면서 124만톤으로 늘었고, 1981년에는 1천만톤을 돌파했다. 1980년대에는 광양제철소의 완공과 함께 2천만 톤을 돌파하였고, 1990년대에는 전기로 제강 설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철강생산이 빠르게 늘어나 2000년에는 4천만 톤을 넘어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업에의 신규 진입과 동부제철의 전기로제강 설비의 신설로 국내 조강생산은 2012년 역대 최대인 6,907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POSCO(세계 6위), Hyundai Steel(세계 18위)이 세계 주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worldsteel.org). 이러한 철강산업은 산업 자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타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철강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과는 차별화될 정도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발달하게 된 철강산업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이자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구분	철강*	섬유	화학	기계	전자	건설
전방효과	1.658	0.847	1.882	0.882	1.032	0.685
후방효과	1.379	1.113	1.089	1.152	0.922	1.071
총연관효과	3.037	1.960	2.971	2.034	1.954	1.756

주 *: 선철·조강과 철강1차제품(비철금속 제외)의 계수를 총투입(산출)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국내 철강산업의 여건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07

‘생산과 수요기반의 새로운 철강거점으로의 도약’

충남의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은 당진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북부권에 집적되어 있다. 충남지역내 생산되는 철강의 대표적인 수요산업으로는 자동차 산업과 건설산업을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충남북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산만 인근의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을 포함해 연 200만대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어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없는 충남의 철강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요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에 있어서도 전세계 철강의 공급과잉하에서 당진 지역에 일관제철 설비 및 고로 확장 등의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내수시장에 기반한 제철·철강재 설비의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은 전체제조업의 40%에 해당하고 있는 산업군이 전기·전자부분이다. 최근의 전기·전자제품에

감성형·고급형 철강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철강제품의 수요량도 점차 확산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건설·건축 등의 직접적인 수요와 함께, 경기·인천 중심의 발달된 제조업에 철강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당진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이 집적·발전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충남의 미래를 결정한다.’

충남은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집적화되기 시작한 철강산업 집적지로서 도로, 항만 등의 양호한 SOC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수요처인 동시에 철강수요기업이 소재한 수도권과 인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면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책적인 육성·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국면에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철강업체도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첫 번째는 생산 지원, 유통물류지원, 연구지원, 인력 공급 등의 산업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재수급, 부산물처리 등을 근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원순환형 철강산업단지의 조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철강재 고급화와 결부된 품질인증이다. 저가 중국 철강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에 대한 품질 인증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화된 고급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을 포함하는 금속·소재 전반의 신뢰성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뿌리산업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기업간, 산학연간 공동협력 및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산업내 소재공급과 소재 가공산업으로, 그리고 철강수요산업으로 다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고급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1차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부품, 최종수요 산업과의 동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맞춤형 정책지원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철강산업 발전의 결과물이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산업집적지는 그저 공장지대일 뿐이다.

★충남, 새로운 철강거점으로 성장하다.

■ 내수 수요에 힘입어 충남의 철강산업은 성장 중



철강수요산업 집적지

- 서울,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철강 수요 존재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도내 철강 수요 풍부



철강산업직접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 충남도내 철강기업의 성장잠재력 우수(144개기업)

기술 선도형			3개	7개	
기술 추격형	6개	9개	16개	1개	
기술 반응형	5개	2개			
단순 생산형	24개	52개	13개	4개	2개
	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정체단계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운동을 시작하자.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미지메이킹 등의 전략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서 존재한다는 정당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실제 전경련의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 윤리경영은 기업의 위기관리에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느냐가 기준이 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도구로 쓰이는 등 혼합된 가치(mixed value)를 창출한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의 경우 행복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설립하였고, 2010년까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과 행복한 학교 등 10곳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1,419개의 일자리 제공하고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30개를 설립하고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충남에서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기업사회공헌에 있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첫째, 일시적인 기부나 단발적인 기획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사회공헌의 아주 초창기 투자방식으로서 현재는 보다 전략적인 사회공헌,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다.

둘째, 기업 스스로가 가진 시장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컨설팅, 기술 공유부터 시작할 수 있겠으나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공장, 냉동창고, shop in shop 형태의 판매공간 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영역을 전반적으로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사회 투자를 위한 지역사회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사회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후속세대 양성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이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사회공헌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과 시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저자 _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중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해!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임

▶ **사회적기업의 역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내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도구로 쓰이는 등 혼합된 가치를 창출함

★지금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함께해요.(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1 일시적인 기부나 단발적인 기획 지양



2 기업 스스로가 가진 시장과 노하우 공유

3 사회적경제영역의 전반적 기반확대를 위한 투자



4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투자 유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는 어떤 관계인가?

‘현재 충남에는 171개의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6월 30일 현재 충남 협동조합 개수는 171개이며, 1개의 협동조합당 평균조합원수는 약 10.9명이며, 평균출자금은 14,885천원이다. 연도별 협동조합 신고수리는 2012년 12월 7개로 시작하여 2013년 102개, 2014년 6월말 현재 62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른생산자협동조합과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

그렇다면 충남도민은 협동조합을 왜 설립할까? 장중익·송성호(2013)의 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영리목적과 함께 ‘지역사회’라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사례를 통해 이러한 목적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이하 바른생산자)’은 서천군의 소상공인과 농민들로 구성된 전문식자재 유통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3월에 설립하였다. 현재 협동조합 조합원은 20명으로, 2013년 약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바른생산자의 시작은 조합원인 ‘얼굴있는 먹거리’의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의 실패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도시의 로컬푸드의 성패는 대형소비처확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천군내 대기업 등을 방문하여 식자재 납품을 시도했지만, 어려웠다. 그러던 중,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로부터 월 5천만원규모의 식자재 납품주문이 들어왔고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궤도에 오른 바른생산자는 협동조합 설립시 약속한 것과 같이 매년 매출액의 5%(약 2,300여만원)를 서천군노인복지관과 어메니티복지마을에 기부하며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바른생산자는 휴경지를 대신 경작해 주는 ‘대리농 협동조합(이하 대리농)’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농은 서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떠나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되는 농작물은 ‘바른생산자’를 통해 판매되어 수익이 보장받기 때문에 대리농은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이는 지산지소(地産地消)로서 좋은 사례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제터먹이)’은 로컬푸드 시스템과 농민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제터먹이는 1억 2천만원의 출자금으로 2013년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콩나물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출하량은 1,400봉지(300g) 정도이다. 이 협동조합 조합원은 119명이며, 생산자·소비자·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터먹이의 주요사업인 콩나물생산은 한살림의 주요 생산자조직인 ‘푸른들영농조합’의 유기농 콩나물 생산사업을 물려받은 것이다. 또한 제터먹이는 kg당 6천원의 최저가격보장제와 36톤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는 푸른들영농조합의 콩나물 재배지 무상임대와 아산 음봉농협의 콩수매자금 지원이라는 협동조합간 협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제터먹이는 콩나물재배만에 그치지 않고 가공품을 통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제터먹이의 최종목표는 지역사회 공동체회복에 있다. 이는 농촌마을이 도시보다 훨씬 복지시스템의 사각(死角)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이에 제터먹이는 ‘늘어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 마을복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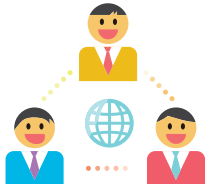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어떤 관계인가?’

두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밀접하다. ‘바른생산자’의 경우, 판로를 찾지 못한 로컬푸드를 지역사회(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가 수용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이에 바른생산자는 조합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했다. 나아가 새로운 협동조합(대리농)을 통해 지산지소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로컬푸드 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터먹이’의 경우도 콩재배를 통한 로컬푸드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영농조합법인 등과의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터먹이는 ‘마을복지시스템의 구축’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들(마을조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소유·운영·분배구조의 혁신성 못지 않게,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새로이 시작하는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충남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_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춘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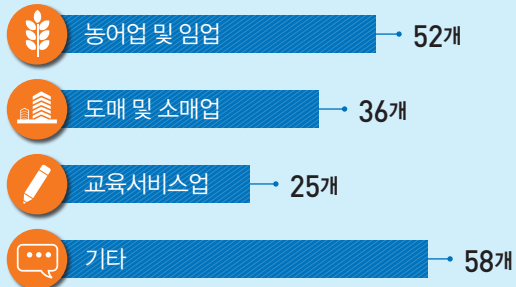
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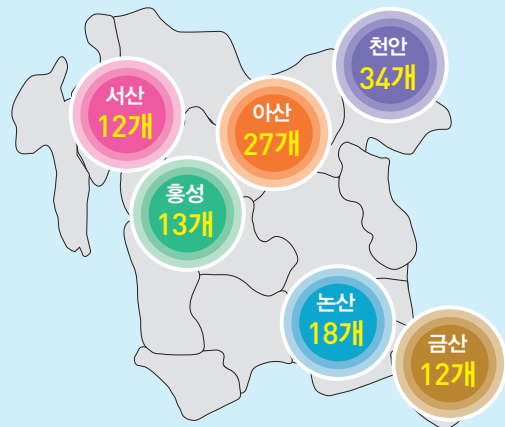
★협동조합이란?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의 사업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충남의 협동조합은 171개(2014.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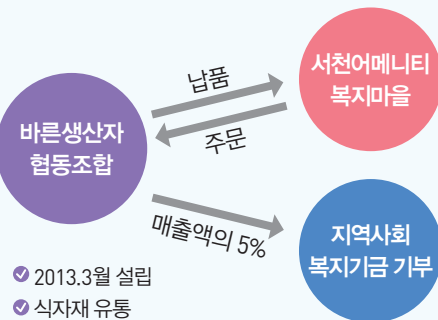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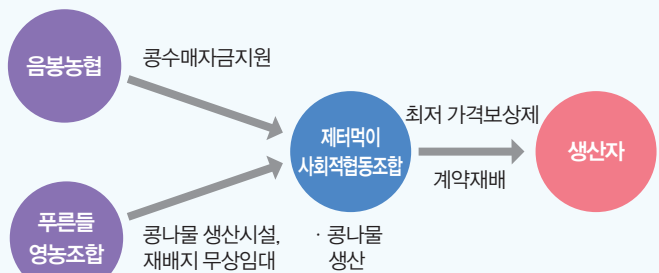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예

1. 지역사회내 수요기반 활용



2.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과 지역의 연계

지역사회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찾기



지역과 사업의
성과 공유하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순환구조 창출”



충남, 노동시장의 현황 파악부터

‘일자리 질 지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현황은 한두 가지 성과지표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노동시장의 성과 지표들로 인해서 지표의 선택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지수가 필요하다. 다양한 노동시장의 지표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의 ‘Decent Work’, EU의 ‘Quality in Work’와 UNECE/ILO/Eurostat의 ‘Quality of Employment’ 등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일자리”, “일자리 질” 혹은 “고용의 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일자리 질을 정의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역별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7가지 지표(고용기회, 고용안정성, 능력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과 고용평등)와 이에 상응하는 세부항목들을 활용하였다.

‘지역별 일자리 질 지수 현황 및 추이’

지역별 일자리 질 지수를 측정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이 64.5로 16개 시도 중 일자리 질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58.9), 경기도(58.6) 순이었다. 반면에 경상북도(45.9), 울산(42.7), 강원도(40.6)는 일자리 질 지수가 낮은 지역이었다. 일자리 질 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기회는 제주도(100.0), 고용안정성은 울산(95.0), 능력개발은 서울(100.0), 임금보상은 충청북도(73.4), 근로시간은 강원도(87.8), 작업장안전은 서울(100.0), 고용평등은 제주도(66.3)가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일자리 질 지수는 50.7로 16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였으며, 지표별로는 고용기회는 3위, 고용안정성은 3위, 능력개발은 14위, 임금보상은 8위, 근로시간은 12위, 작업장 안전은 3위, 고용평등은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일자리 질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충남지역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9위(46.3)에서 2012년 7위(50.7)로 순위가 2단계 상승하는데, 이는 7가지 지표 가운데 2008년 하위권이던 고용안정성(10위→3위)의 순위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 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열악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일자리 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7가지 지표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근로시간, 고용평등, 능력개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먼저 근로시간, 고용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 5일 근무제도의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개발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우수인재의 육성 및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표인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작업장 안전 등의 지표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영민



충남지역 노동시장 현황 파악하기

★마하! 일자리 질 지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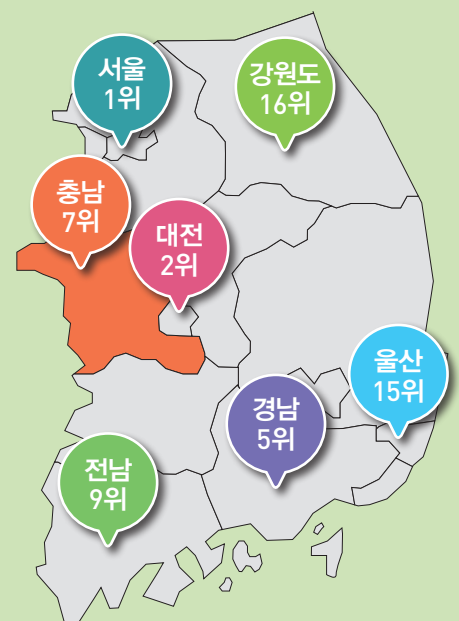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지수



★충남지역 일자리 질, 어디까지 왔니? '08년 9위에서 '12년 7위로 2단계 상승



※ 12년 일자리 질 지수



★하위권 구성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은?

- 🕒 주 5일 근무제도의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 🏠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책
- 🎓 산업구조의 고도화: 우수인재 육성 및 양성
- 🌱 우수한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작업장 안전지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의 필요

충남지역 삶의 질 : 현황과 과제

이제는 삶의 질, 충남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노력 시급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까?'

견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그 성격이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독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Better Life Index 가 있다. 이 지수는 기존 거시경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별로 주거, 소득, 고용/임금,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생활만족도, 치안 등 총 11개부문 24개 지표를 합성하여 각 국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다.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회원국과 2개의 비회원국 총 36개국 중 25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생활만족도, 소득, 주거 등의 부문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나 일-생활 균형, 사회관계, 건강, 환경 등의 부문은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조한 수준이다.

'충남, 중상위권의 삶의 질을 기록하였으나 지역/부문별 양극화 상존'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지역별로 상이한 삶의 질을 가늠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지역 별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발표되고 있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이하 '삶의 질 지수')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생활환경 등 총 7개 부문 2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이 지수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측정대상 지역이 국내 139개 시·군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충남 기초 지자체들이 모두 측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지역별로 상이한 삶의 질을 살펴보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 지수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은

조사대상 8개 광역자치도 중에 중상위권의 삶의 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보건복지 및 교육 환경이 다른 광역자치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경제와 환경부문은 중하위권, 문화여가나 지역사회 부문은 하위권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이 지수에 따르면 충남의 기초지자체 별로 삶의 질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은 삶의 질 지수 구성부문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포함되며 전체 139개 시·군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삶의 질을 기록한 반면, 하위 50%에 포함되는 충남 내 시·군도 6개나 된다. 더욱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큰 편차가 상존한다. 조사대상 전체 139개 시·군 중 부문별 지표 기준으로 100위권 밖(약 하위 25%)에 포함된 충남 시·군의 개수는 지역경제(7개), 환경(7개), 지역사회(7개), 문화여가(4개), 교육(4개), 보건복지(3개), 생활환경(3개)이다. 즉, 충남지역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중상위권 수준이나, 지역별/부문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민 삶의 질 파악과 제고를 위해 지역/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필요

앞에서 살펴본, '삶의 질 지수'는 도민들의 행복감을 가늠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나 이 지수가 도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왜곡 없이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도민들의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도민들의 행복감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높아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해당부문을 개선할 경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이외 여러 부문이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적 상황에 알맞은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확충, 고령화대비와 인구유입 정책, 재정자립도의 개선, 낙후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률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 및 사업 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충남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저자 _ 공주대학교 황상연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지역별 삶의 질 차이를 줄여보아요



★ 삶의 질은 어떻게 측정할까?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지역사회, 환경 총 7개 부문 24개 변수로 구성된 조사결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측정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이하 삶의 질 지수)로 살펴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대상 : 2013년 전국 54개 시단위, 85개 군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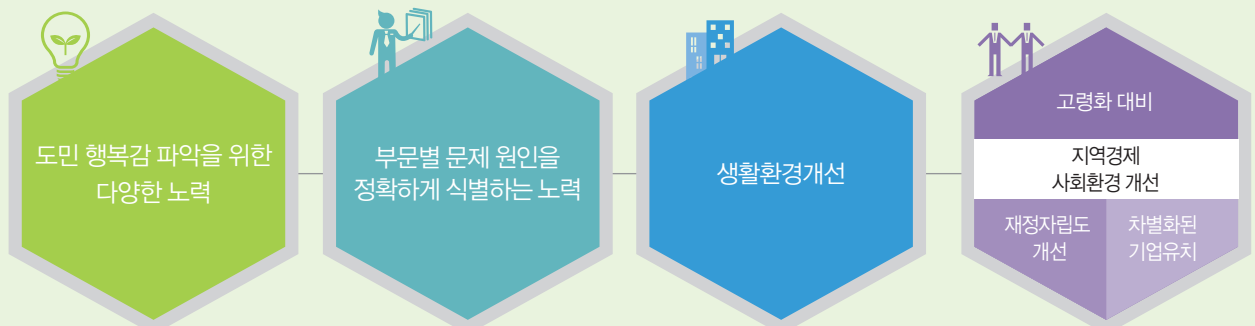
★ 남의 삶의 질 지수 알아보기(광역자치도별 비교)



★ 충남의 지역별/부문별 삶의 질 지수의 차이가 심해요.

	삶의 질 지수	보건복지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	지역사회
상위 25%	천안 아산	천안 공주 논산 계룡 청양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천안 계룡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천안 공주 아산	홍성 금산 부여	천안 아산 계룡
상위 50%	공주 보령 계룡 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아산 부여 금산 서천 홍성	공주 보령 홍성 예산 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금산 태안	서천 홍성 예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예산	공주 서산 당진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 함께 행복해 지는 충남 만들기



충남지역 R&D 투자를 통한 산업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재고 방안

산업별 맞춤 R&D 투자를 통해 충남 지역 주요 산업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늘려야

‘충남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한 민간 R&D 활성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10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 중 하나로 충청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주요 산업들의 생산성이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R&D 투자 정책도 충남 지역의 주요 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산업별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주요 산업인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충남 지역의 주요 산업에 대한 민간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R&D 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미침’

세계화 시대에서 기업의 R&D 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든 산업에 걸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비교하여 충남지역 주요 산업들의 R&D 투자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D 투자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는 모두 장기적인 R&D 투자가 지속될 때 효과가 있으며, 산업별로는 직·간접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기업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에 모두 시차를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R&D 투자가 지속되었을 때, R&D 투자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시사하며, 또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직접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동 산업에서 R&D 투자의 간접효과는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서 크게 나타남으로써 자본집약적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선행적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시사한다. 충남지역의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R&D 투자는 기업 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더 큰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전자부품 산업에서의 R&D 투자는 자동차 산업보다 해외직접투자에 증가에 더 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화학제품 산업 및 기계장비 산업에서 R&D 투자는 수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업생산성을 통한 R&D 투자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화학제품 및 기계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R&D 투자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별로 R&D 투자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R&D 투자 정책의 방향도 산업별로 다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충남의 주요 산업의 R&D 투자는 장기적이고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이 필요’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R&D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R&D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석결과 산업별로 R&D 투자의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R&D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지원 정책인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에서는 R&D 투자의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혁신형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화학제품 및 기계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R&D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저자 _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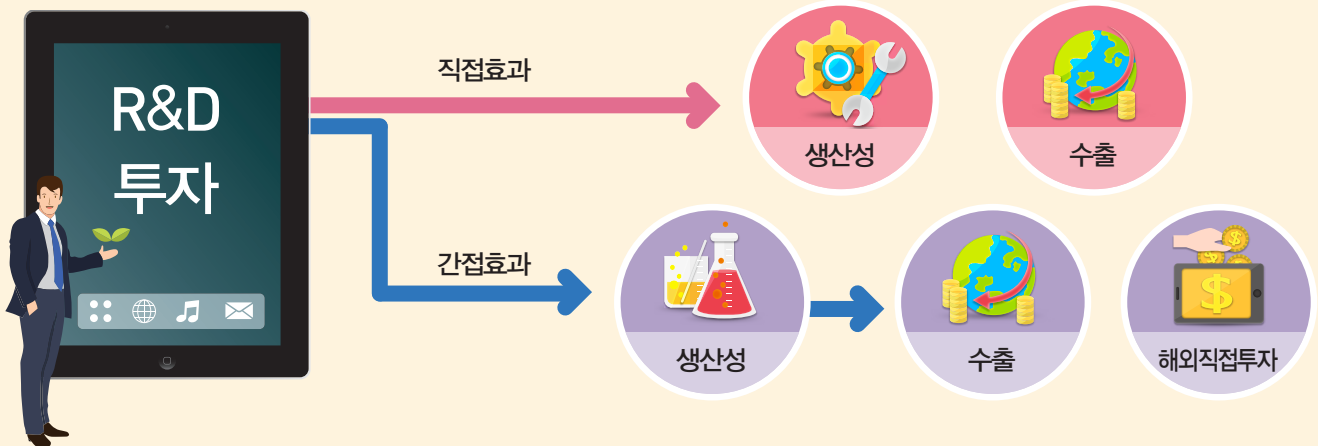


충남의 주요 산업별 R&D 투자의 직·간접효과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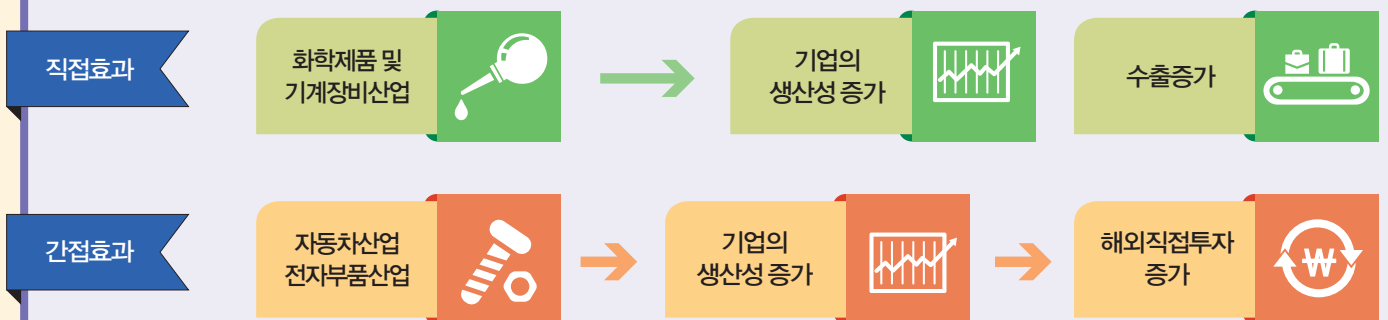


★R&D투자의 직·간접효과란 무엇일까?

정의: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직접효과)과 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간접효과)를 말함



★충남의 주요 산업별 R&D투자의 직·간접효과 분석은?



★충남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해요.

- ✓ 장기적 R&D 투자 활성을 위한 기업별 보조금 지원 및 규제개선 노력
- ✓ 산업별 맞춤형 R&D 전략 정책 필요
 -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 지원
 - 간접효과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은 공정혁신형 R&D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직접효과가 큰 산업은 기술혁신형 R&D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도모



충남지역 창의인력 실태 분석

충남의 창의인력,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창의인력이란?’

창의인력을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창의적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력을 창의인력으로 보는 것이다. Florida(2004)는 창의인력(creative class)을 창의핵심그룹(super-creative core)과 창의전문가그룹(creative professionals), 문화예술그룹(bohemian)으로 구분한다. 창의핵심그룹은 새로운 아이디어, 콘텐츠, 기술 등을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으로서 과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대학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창의전문가그룹은 복잡한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집단들로서 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식지향적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영관리자, 금융재정 분석가, 변호사 등을 포함한다. 보헤미안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창의인력은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문화적 재화(cultural goods)에 대한 소비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는 실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의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창의인력 수는 492.9만명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의 22.2%, 총인구 대비로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의 비중이 30~37%인데 비해 우리나라 창의인력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고, 이 비중이 지난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 창의인력의 비중 추이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창의인력 비중이 27.0%로 제조업의 12.6%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이러한 격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의 창의인력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종사자중 창의인력의 비중이 2000년 20.2%에서 2010년 12.6%로 급감하였는데, 제품제조 경쟁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두뇌기능(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창의인력,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성장률은 높아’

충남의 창의인력 전국대비 비중은 2.9%인데, 총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충남의 비중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의 창의인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지역내 총종사자 중에서 창의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창의인력 비중이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이 27.9%로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이 14.4%로 나타나 전남과 경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2010년간 창의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체 창의인력의 경우 경기의 성장률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충남의 성장률이 2.9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창의핵심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경기 다음으로 높은 4.99%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력에서는 충남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 10.82%를 보였다. 2010년 현재 충남도 내에서 창의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이며, 그 뒤를 아산시와 서산시가 잇고 있다.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계룡시로 24.2%를 보이고 있는데, 계룡시는 지난 10년간 창의인력의 성장률이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창의인력의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창의인력(Creative workers)이 보유하는 지식과 아이디어는 지역의 인적자본, 혁신성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인력의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적 능력은 지역의 활력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창의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에 창의형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 및 산업 생태계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로는 첫째, 생태계 전체를 리드하는 핵심주체(keystone)가 있어야 하고, 생태계의 구성주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common assets)과 플랫폼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구성주체 간 상호신뢰와 협력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산업융합시대에는 이러한 협력기반이 특히 더 중요한데, 일정 지역 내 공간적 집적의 확대 및 클러스터링의 강화가 기업 간 제품의 기술 분화와 차별화를 확대하여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창의형 인프라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창의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도전적 R&D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영수



충남의 창의인력 성장을 위한 현황 파악하기

★ 창의인력이란,

창의핵심그룹(super-creative core)과 창의전문가그룹(creative professionals), 문화예술그룹(bohemian)으로 구분함

창의핵심인력

새로운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 새로운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학, 정보통신, 공학, 보건·사회복지, 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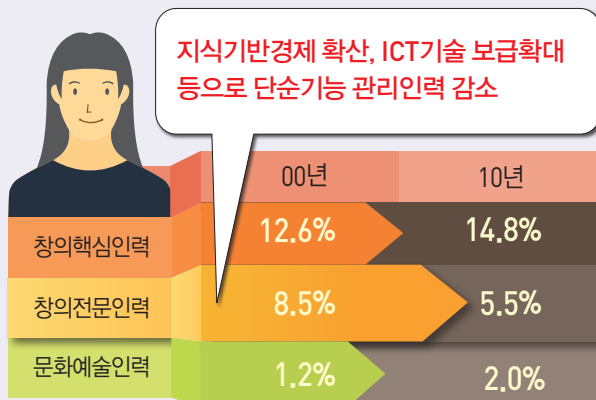
창의전문인력

기존 지식의 창의적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관리직, 법률·행정 전문직, 경영·금융전문가 집단

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종사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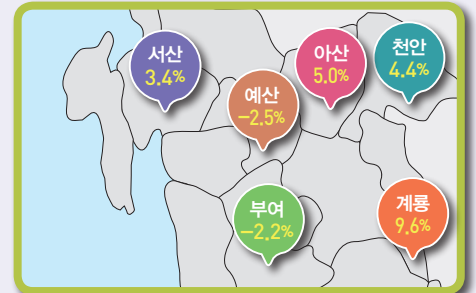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2000~2010년) 우리나라 창의인력의 유형별 비중 추이



★ 충남의 창의인력 성장은 비교적 빠른편 (2000~2010년) 성장률

전국	충남
1.89%	2.96%

★ 충남의 창의인력 현황은?



충남의 對中소비재 수출 키워드, 신통방통(新通坊通)

Korean Made, 中시장에서 신통방통(新通坊通)하라!

‘충남의 對中 수출구조 IT제품 집중도 높아’

21세기 들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특징은 충남지역의 수출 구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년 1~10월 중 충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54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對中 수출이 44.8%를 차지했으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로 크게 높아진다. 충남의 對中 수출품목은 반도체(24.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대 품목 중 4개가 IT제품으로 이들 품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對中 수출이 자본재, 중간재 위주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아질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라도 연결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프레임 변화와 소비시장 트렌드에 주목해야’

그동안 중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최근에는 7%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고속성장의 마감과 중속성장 시대의 개막이라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에 직면해 있다. 20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허난성 시찰 시 “중국경제는 2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뉴노멀(신장타이, 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하면서 처음 언급된 중국식 뉴노멀은 ‘중고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 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 위주 2차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앞으로는 소비가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기조 변화를 근거로 한 뉴노멀 시대의 내수확대 정책은 전자상거래 확대, 녹색소비의 촉진, 주택매매 활성화, 관광·레저 소비의 업그레이드, 교육·문화·오락·체육 소비 확대, 양로 및 헬스 서비스 발전 등 6대 소비분야의 육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오는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오는 2022년 전체 도시가구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중산층과 주력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80後(바링허우, 八零後)세대, 그리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공략, 신통방통(新通坊通) 전략으로!’

2014. 10월 중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10대 도시, 2,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제품 중 화장품에 대한 구매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 중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한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공략 포인트는 ‘신통방통(新通坊通)’으로 압축된다.

첫째, 한국산 제품은 중국인들에게 디자인 경쟁력이 있고,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80後, 90後 세대의 주력 소비계층으로의 부상에 대응,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마케팅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TradeKorea(www.tradekorea.com), Kmall24(www.kmall24.com) 등 공신력을 갖춘 무역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창구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효과적이다. 셋째, 중서부, 농촌, 2·3선 도시의 성장 등 내수확대에 따른 소비시장이 영역 확산에 대응하여 점(點)→선(線)→면(面)으로 연결되는 확장형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시장(Mass Market)에 뿌리내리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며, ‘현지기업이 되어야 하지만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현지기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지화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Korean Made 제품과 서비스가 프리미엄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구사하는 입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조상현

중국 소비재 시장 공략, 신통방통 알아보기



최근 충남의
대중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던데?
혹시아니?



수출비중

44.8%



반도체 비중

24.7%

충남의 전체 수출 중
44.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주요 제품은 반도체와
같은 IT제품들이지



*자료: 2014.1~10월 무역통계

그런데 요즘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더군
뉴노멀시대라고
말이야~



※ 뉴노멀시대란, 중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의 특징을 가졌으며, 중국의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난 다음을 의미



제조업 위주
2차 산업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의 재편

내수확대 정책으로 6대 소비분야의 육성



전자상거래
확대



녹색소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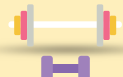
주택매매
활성화



관광·레저
소비 촉진



교육, 문화, 오락, 체육
소비 촉진



양로, 헬스
서비스 발전

신

신(新) 트렌드를 선도

세련된 디자인과
'fashionable'한 이미지를
살려 트렌드를 선도

방

전국 방방곡곡 진출

유통경로 다양화로 중서부,
농촌, 2·3선 도시까지
영역을 확장

통

온라인 시장에 통(通)하라

On-line market을 적극
활용, 80後, 90後세대를
공략

통

현지화로 통(通)하라

대중시장에 파고드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되,
현지기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됨

그래서 준비했어.
신통방통(新通坊通)한
중국시장 공략기
소비재 시장을 잡아라.



충남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거래 활성화 필요

**충남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2001년 10.5%에서
2013년 34.3%로 가파르게 상승**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비중은 2% 미만**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액은 30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279억 달러 흑자로 전체 무역흑자의 88.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충남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충남의 對中 수출은 연평균 25.8%, 對中 수입은 1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충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5%에서 2013년 34.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금년 2/4분기 중 수출의 1.9%, 수입의 0.8%에 불과하다.

**위안화 거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및
대중국 거래 증진 기대**

① 환리스크 부담 감소

중국과의 거래에서 무역대금을 美 달러화(USD)로만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위안화(RMB) 활용을 병행하는 경우 환리스크가 분산된다. 특히, 중국 현지에 법인이 있어 국내 본사와 거래가 활발한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의 환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②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종 외국환 거래에 따른 규정 및 절차 간소화

중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위안화 이외의 외국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 부담을 덜 수 있다.

③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위안화 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환전 시 외환 중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대고객 환전시장에서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외국환은행의 주된 거래방식인 홍콩소재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에 비해 결제단계가 감축되어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중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와 거래 증진에 도움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위안화 거래를

요구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는 중국 바이어 및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과 우리 정부의 위안화 활용 촉진 노력

중국 정부는 2009년에 위안화의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자국통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융 분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역외허브를 적극 육성하는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의 움직임과 더불어 위안화는 무역 결제통화 단계를 넘어 금융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통화로서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무역 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12년 1월 5.5%에서 2014년 8월 18%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가운데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 38.5%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 제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10.31일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현재 對중국 무역액의 1.2%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무역거래시 위안화 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남의 대중국 무역거래시 위안화 거래 활성화 필요

이에 따라 금년 12월 1일 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는 등 위안화 거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1월 6일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출범 이후 총 6개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거래중이며,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단계를 한 단계 줄임으로써 거래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거래량이 증대하도록 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과 위안화 금융상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은 무역결제 관련 서비스도 계속 확대 예정이다. 중국은 충남의 최대의 교역상대국이므로 위안화 거래의 편익을 정확히 알고 직거래시장을 활용한다면 충남의 무역업체들은 새로운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충남 대중국 수출비중 증가에 따라 위안화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충남의 대중국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수출 1위 국가
2013년 전체 수출의 47.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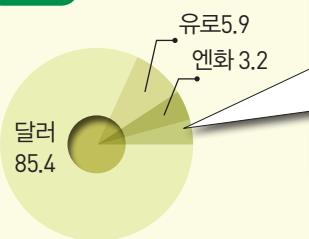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
2013년 전체 무역흑자의 88.8%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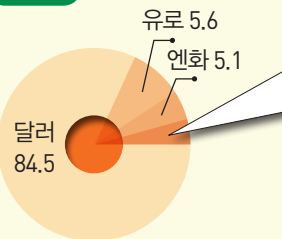
교역 비중의 급성장
'01년 전체 교역액 대비 10.5%
→ '13년 전체 교역액 대비 34.3% 차지

우리나라 결제통화별 수출입 비중 (2014.1~6P, %)

수출



수입



위안화 거래에 따라 우리 기업이 얻게 될 편익은?

환리스크 부담 감소



주요 결제통화인 달러의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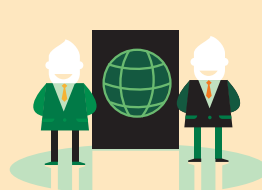
각종 외환 거래에 따른 규정 및 절차가 간소화돼요.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위안화 거래시 거래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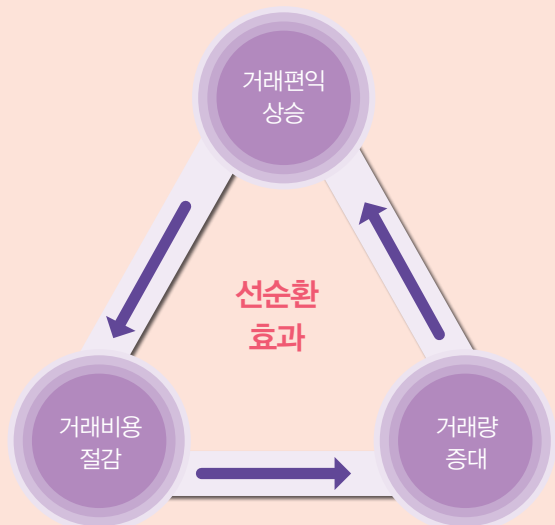
은행간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환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중국 기업과의 관계
강화와 거래



앞으로의 충남은?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 단계 축소로 인한



A large circular graphic with a white center and a dark gray outer ring. Two curved arrows, one dark gray and one light gray, point clockwise around the circle.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gray with a faint, stylized bar chart pattern.

충남경제뉴스 및 시책

충남경제뉴스

2014. 12. 14

산학연 협력 지식산업 새로운 활로 찾다

16일 도청 문예회관서 산
학연 협력 지식산업네트
워크 대회

- 산학연충남지역협회와 충남창업보육협회, 지역혁신센터(RIC), 지역연구
산업(RIS) 등 4개 사업단과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사업단별 사업 소개에서는 특허출원 1424건, 시제품개발 276건, 공정개선
251건, 신기술개발 123건, 고용창출 6848명, 매출액 증대 1518억 1000만 원
등 최근 4년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식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담론의 장 마련

2014. 12 16

‘2014 고용창출 우수기업’ 3개 업체 선정

16일 성광제약(주) 등에
인증패…
총 134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성광제약
(주), 아성크린후로텍(주), (주)에스앤비푸드 등 3개 기업을 선정, 인증패 수여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보다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10%이상인 기업에 대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개선 비용 1500만 원을 지원
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되며,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10% 할인
등의 혜택 제공

2014. 12. 17.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완판’

2차 전지 및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내포 32만㎡에
공장 건립
도, 14개 기업과 MOU…
도내 6개 시·군에
총 4580억 투자

- 안희정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승진 (주)위나동방코리아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 김홍장 당진시장 등 6개 시·군 시장·군수 등과 합동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 14개 기업은 오는 2017년까지 도내 산업단지 89만 7788㎡의 부지에 모두
4580억 원을 투자, 신규 2297명을 비롯해 3598명의 고용 창출
- 도는 이들 14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앞으로 3년 간 도내
에서 6371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여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2조 8560억 원의 생산액
과 6023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2014. 12. 19.

‘대한민국 수출 견인’ 충남 유공자 · 기업 포상

19일 도청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 충남
수출유공자 시상식

-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와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회장을 포함한 도내 수출 관련 기관 · 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포상 전수와 충남도 수출탑 및 수출 유공자 시상이 진행
- 올해 도에서는 제51회 무역의 날에 드림텍이 5억불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60개사가 수출탑을 받았으며, 인귀승 코다코 대표와 조재용 대산엠엠에이 대표 등 2명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28명이 유공자 표창 수상
-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수출이 541억불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된 데 대해 도내 수출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힘

2014. 12. 22.

충남 ‘웰니스 산업’ 허브로 키운다

향후 3년간
167억 투자...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총 6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충남TP(바이오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단국대학교,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민간기관이 공동 참여
- 도는 ▲ 질환별 · 효능별 맞춤형 온천치료 ▲ 스파 체험프로그램 개발 ▲ 수(水)치료 프로그램 효능평가 ▲ 스파 시제품 개발 및 특허 · 인증 지원 ▲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웰 에이징(건강노화)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사업’, ‘스파 기반 메디&라이프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등 후속 사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

2014. 12. 2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국 최우수’ 패거

22일 대통령상 수상...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준수 노력 결실

- 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2014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단체 시상식’에서 광역 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대통령상과 포상금 4500만 원을 수상
-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 고용 · 노동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개선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사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환황해 시대 노사민정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충남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2014. 12. 25.

상생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오른다

내년 산단 정주여건
개선 · 공모 등 75개
사업 본격 추진

초등학교 설립 등...
2018년까지 4년 간
3135억 원 투입

- 도는 내년 상생산단 조성사업으로 올해 발굴한 5개 분야 70개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지난해 선정한 3개 시 5개 공모사업 등 75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힘
-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투입하는 예산은 1251억 2000만 원이며,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에는 모두 3135억 원을 투자
- 도 관계자는 “1차 년도인 '14년은 상생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해왔으며, 앞으로는 산단을 상생 · 융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 이라고 밝힘

2015. 1. 6.

‘수소연료전지차 예타’ 산업부 심사 통과

기재부 최종 판단 남아...
통과뎀 수소차 부품
산업 육성 청신호

- 충남도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신청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도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어 이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도가 신청한 이번 예타 사업은 국비 1550억 원과 지방비 466억 원, 민자 308억 원 등 총액 2324억 원 규모이며,
- 이번 예타사업이 최종 통과될 경우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이 대폭 증가되어 기술향상, 새로운 시장 확대 등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5. 1. 8.

‘서민경제 뿌리’ 소상공인 생존전략 모색

16일까지 IP스타사업
접수...
스케일업 · 스타트업
사업 등 추진

- 충남도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총 예산액 2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을 추진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 특허맵, 특허 기술 홍보(특허3D 시뮬레이션), 브랜드개발, 디자인 개발 사업 및 기업 맞춤형 소규모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 사업에 따라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지정 되면 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스케일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각각 최대 3000만 원과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
- 도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기초로 도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2015. 1. 9.

지식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미래 밝힌다

창업 · 성장 · 연구개발
3단계 걸쳐 총 11개
사업에 223억 투입

- 지식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창업 · 성장 · 연구개발 등 3단계에 걸쳐 총 11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단계별로 창업 단계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사업에 약 47억 6900만원 지원
- 성장단계는 ▲중소 · 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충청권 중소 · 벤처기업 박람회 ▲충남테크비즈존 운영 ▲그린바이오 기술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
- 연구개발단계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지역연구산업(RIS)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52억 2200만 원이 지원

2014. 1. 1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원 푼다

올해 창업 · 경쟁력강화
자금 등 업체당
최대 25억 원 지원

- 충남도는 올해 도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힘
-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690억 원 ▲경쟁력강화자금 710억 원 ▲혁신형자금 730억 원 ▲기업회생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1450억 원 ▲소상공인자금 1400억 원 등이고,
-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25억 원 ▲혁신형 및 기업회생자금은 5억 원이며, 업체 부담금리는 연리 2.3~3.7%로 융자 지원하고, 도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계획
- 지원 신청은 올 12월까지이며, 접수는 창업 · 경쟁력 · 혁신형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 · 기업회생 자금은 시 · 군 지역경제과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경제지원시책

충남 조명부품 · 소재산업 기술사업화를 통한 제품확장 · 고급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조명부품 · 소재산업의 시장주도 기술상품 확산
-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선문대학교, (참여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 모집대상 : 충남지역 조명부품 · 소재산업 관련 기업

- 단, 선문대학교와 가족회사 협약체결이 안된 기업은 선문대학교 가족회사 등록 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총괄표

성과지표명		세부지원내용	지원금한도 (천원)
기술 지원	제품고급화 (5건)	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생산공정, 품질개선 및 기능향상 등의 제품고급화 지원	2,000
	인증 (11건)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 인증 지원(KOLAS 국제 공인 인증시스템)	2,000
사업화 지원	상품기획 (15건)	시장지향 상품전략, 라인업 프로세스를 통한 유망상품 기획 지원	1,500
	컨설팅 (15건)	재무, 자금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상품 사업화 자문서비스 지원	1,500
	마케팅 (10건)	수출상담회 및 전시박람회 현장홍보 지원	1,500
	브랜드연계 (20건)	바이어 연결지원, OEM 시제품 제작, 디자인 지원	1,500

- 지원기업 유의사항 : 한 개 지원분야는 2개까지 중복지원 신청 가능(1,2차 선정 기업은 선정 건수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01. 02(금) ~ 2015. 04. 30(목)
- 접수처 및 문의
 - 기관명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공학관 715호
 - 전 화 : 041-530-2771, 041-530-2774
 - 이메일 : 전화진 담당, serock11@sunmoon.ac.kr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000억원

□ 지원대상

- 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공고문 「붙임1」의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및 「붙임2」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창업자금 :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경쟁력강화자금 :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자금 : 3 ~ 10억원 한도(연간 매출액 범위 이내)
 -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 · 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도 유망중소기업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道에서 1.75 ~ 3.0% 이자보전)
 - －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1.0% 추가),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우대(2.0% 추가)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명절 : 설, 추석)】

- 대 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 청 : '15.1월, 8월(예정) 관할 시 · 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이자보전)

-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5억원 한도
 - － 연리 2.6 ~ 2.8% 업체 부담(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기업회생자금 : 5억원 한도
 - － 연리 2.3%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조건

- 신청기간 : 2015. 12월 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 접 수 처
 - －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21)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881-5456)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번지
 -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시 · 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 소상공인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본점 및 5개 지점)



부 록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4. 주요 해외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9	2010	2011	2012	2013 ^P	2014 ^P
국내총생산(GDP) ¹⁾	조원	1,152	1,265	1,333	1,378	1,428	—
1인당GDP ¹⁾	만원	2,342	2,561	2,677	2,755	2,844	—
국민총소득(GNI) ¹⁾	조원	1,149	1,267	1,341	1,392	1,441	—
1인당GNI ¹⁾	만원	2,336	2,563	2,693	2,783	2,870	—
경제성장률 ²⁾	%	0.7	6.5	3.7	2.3	3.0	—
생산구조	—						
농림어업	%	2.6	2.5	2.5	2.5	2.3	—
광공업		28.9	30.9	31.6	31.2	31.3	—
전기·가스·수도사업		2.0	2.2	2.0	2.1	2.3	—
건설업		5.7	5.1	4.8	4.8	5.0	—
서비스업 및 기타		60.8	59.3	59.1	59.4	59.1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4.4	80.3	80.5	78.5	76.2	—
취업자	천명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농림어업	%	7	6.6	6.4	6.2	6.1	5.7
광공업		16.4	17.0	16.9	16.7	16.8	17.0
건설업		7.3	7.4	7.2	7.2	7.0	7.0
서비스업 및 기타		69.3	69.1	69.5	69.9	70.1	70.3
실업률	%	3.6	3.7	3.4	3.2	3.1	3.5
경상수지 ³⁾		33,593	28,850	18,656	50,835	81,148	—
상품수지	백만달러	47,814	47,915	29,090	49,406	82,781	—
서비스수지		-9,590	-14,238	-12,279	-5,214	-6,499	—
본원소득수지		-2,436	490	6,561	12,117	9,056	—
이전소득수지		-2,195	-5,317	-4,716	-5,474	-4,189	—
수출액	억달러	3,635	4,664	5,552	5,479	5,596	5,731
수입액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총저축률	%	32.9	35.0	34.6	34.2	34.4	—
민간 비중	%	25.2	27.1	26.6	26.6	27.7	—
정부 비중		7.6	7.8	8.0	7.6	6.8	—
총자본형성 ⁴⁾	십억원	343,840	405,188	419,283	409,640	409,571	—
최종소비지출	%	66.8	64.8	65.5	66.2	66.0	—
민간 비중	%	51.7	50.3	51.0	51.4	51.0	—
정부 비중		15.2	14.5	14.6	14.8	14.9	—
생산자물가 등락률	%	-0.2	3.7	6.7	0.7	-1.7	-0.6
소비자물가 등락률	%	2.8	3.0	4.0	2.2	1.3	1.3

주 : 2010년 기준 1)명목 2)실질성장률 3)IMF의 새로운 국제기준 적용(BPM6) 4)자본재형태별(원계열, 실질)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9	2010	2011	2012	2013 ^P	2014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717,561	831,668	918,164	953,079	971,839	—
전국대비 구성비 ¹⁾	%	6.23	6.57	6.90	6.92	6.81	—
GRDP 성장률 ²⁾	%	2.2	11.8	6.8	3.6	5.3	—
1인당 GRDP	천원	35,200	40,069	46,632	44,709	45,244	—
생산구조 ³⁾	—						
농림어업	%	5.4	4.9	4.7	4.7	—	—
제조업		50.7	54.0	57.5	57.3	—	—
전기가스수도업		3.9	3.8	2.9	2.6	—	—
건설업		6.9	6.3	6.0	6.4	—	—
서비스업 및 기타		33.1	31.0	29.0	29.0	—	—
15세이상인구	천명	1,588	1,613	1,643	1,717	1,811	1,855
경제활동인구	천명	991	1,003	1,025	1,080	1,170	1,198
취업자	천명	961	974	1,001	1,056	1,137	1,158
농림어업	%	18.9	16.8	16.2	15.1	14.6	13.9
광공업		17.1	19	20.4	20.2	21.7	21.6
건설업		5.8	5.6	6.4	6.6	6.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8.2	58.6	57.0	58.1	57.0	58.7
실업자	천명	29	29	24	25	33	40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97	610	618	637	641	657
경제활동참가율	%	62.4	62.2	62.4	62.9	64.6	64.6
실업률	%	3	2.9	2.3	2.3	2.8	3.4
고용률	%	60.5	60.4	60.9	61.5	62.8	62.4
무역수지	백만달러	20,299	29,161	26,314	28,591	31,360	32,009
수출액	백만달러	39,428	54,054	59,954	61,752	64,282	65,143
수입액		19,129	24,893	33,640	33,161	32,922	33,133
소비자물가등락률	%	2.7	3.0	4.1	2.4	1.2	0.5

주 : 2010년 기준. 1) 당해년가격(명목) 2) 기준년가격(실질) 기준 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천 안 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195,920
공 주 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28,768
보 령 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25,242
아 산 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62	213,087	231,636
서 산 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101,429
논 산 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27,545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8	4,058	4,482	4,748
당 진 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5	60,282	72,559	94,821
금 산 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17,283
연 기 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30,477
부 여 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16,007
서 천 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16,164
청 양 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7,431
홍 성 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17,875
예 산 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6	16,081	17,517	18,158
태 안 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15,311
충청남도 ²⁾	392,511	437,060	513,069	543,352	590,313	640,665	717,561	831,668	918,164

주 : 2005년 기준, 1)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2)2005년부터 2010년 기준으로 변경 적용

자료 : 통계청,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수(2010=100)	전월비	6개월전비	12개월전비	지수(Trend=100)	전월차
2011.12	109.3	0.5	5.3	5.6	101.1	0.1
2012.01	109.6	0.3	4.8	5.3	101.0	-0.1
2	110.5	0.8	5.5	5.6	101.4	0.4
3	110.5	-0.0	4.7	5.1	101.0	-0.4
4	110.9	0.4	4.6	4.9	101.0	-0.0
5	111.2	0.3	4.4	4.6	100.9	-0.1
6	111.2	0.0	3.7	4.1	100.5	-0.3
7	111.4	0.1	3.4	3.8	100.3	-0.2
8	111.4	0.1	2.9	3.4	100.0	-0.3
9	112.0	0.5	3.3	3.6	100.2	0.2
10	111.9	-0.1	2.5	3.0	99.8	-0.5
11	112.0	0.1	2.2	2.8	99.5	-0.2
12	112.3	0.2	2.2	2.7	99.4	-0.1
2013.01	112.4	0.1	2.0	2.4	99.2	-0.3
2	112.5	0.0	1.6	2.2	98.9	-0.3
3	112.8	0.3	2.0	2.2	98.9	-0.0
4	113.2	0.3	2.2	2.2	98.8	-0.0
5	113.7	0.5	2.8	2.5	99.0	0.1
6	113.5	-0.2	2.1	2.0	98.4	-0.5
7	113.8	0.3	2.3	2.1	98.4	-0.1
8	114.8	0.8	3.5	2.8	98.9	0.5
9	115.7	0.8	4.5	3.4	99.3	0.4
10	117.2	1.3	6.6	4.6	99.8	0.5
11	118.1	0.7	7.3	5.2	100.4	0.6
12	118.8	0.4	6.2	5.1	100.5	0.1
2014.01	119.4	0.5	6.2	5.3	100.7	0.4
2	119.2	-0.2	4.8	4.7	100.6	-0.3
3	119.2	0.0	4.1	4.5	100.3	-0.3
4	118.3	-0.7	1.9	3.3	99.2	-1.1
5	118.2	-0.1	1.3	2.7	99.1	-0.1
6	117.8	-0.3	0.2	1.9	98.5	-0.5
7	118.5	0.5	0.9	2.0	98.8	0.3
8	119.4	0.7	1.8	2.3	99.3	0.5
9	119.9	0.5	2.3	2.3	99.5	0.2
10	120.5	0.5	2.8	2.6	99.8	0.3
11	120.8	0.2	2.8	2.6	99.7	-0.1

자료 : 2014년 10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14.12.

생산활동(생산, 출하, 재고 지수)

(2010=100, %)

구 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2011.10	113.1	108.0	6.8	-0.4	114.3	110.0	8.4	1.9	130.4	130.6	26.8	0.0
11	110.0	107.4	4.0	-0.6	110.5	106.6	3.2	-3.1	136.4	139.8	31.6	7.0
12	110.9	107.5	5.1	0.1	114.8	109.2	10.6	2.4	122.2	123.8	11.4	-11.4
2012.01	103.7	109.3	3.9	1.7	103.6	108.8	5.2	-0.4	130.2	128.0	15.6	3.4
2	105.1	110.0	5.2	0.6	105.5	109.0	3.2	0.2	115.0	112.8	2.2	-11.9
3	114.0	109.7	5.3	-0.3	113.8	110.1	5.6	1.0	125.5	124.5	12.8	10.4
4	108.4	110.4	8.0	0.6	107.8	110.3	5.9	0.2	116.3	112.8	0.6	-9.4
5	108.6	107.3	0.8	-2.8	111.7	111.2	4.6	0.8	116.8	116.0	-4.1	2.8
6	110.3	107.8	-0.2	0.5	111.2	109.9	1.8	-1.2	117.5	119.8	0.7	3.3
7	106.7	106.8	-1.7	-0.9	109.1	110.5	3.3	0.5	122.6	121.2	1.2	1.2
8	101.4	103.3	-0.1	-3.3	104.7	107.2	0.3	-3.0	122.1	123.5	1.2	1.9
9	103.9	104.0	-4.1	0.7	107.8	107.7	-0.3	0.5	119.5	123.5	-5.4	0.0
10	109.7	106.5	-1.4	2.4	112.0	108.7	-1.2	0.9	118.9	120.7	-7.6	-2.3
11	108.7	106.2	-1.1	-0.3	110.4	106.8	0.2	-1.7	119.3	122.1	-12.7	1.2
12	107.2	107.9	0.4	1.6	108.7	107.6	-1.5	0.7	128.8	127.4	2.9	4.3
2013.01	108.6	107.4	-1.7	-0.5	108.8	107.7	-1.0	0.1	140.2	135.3	5.7	6.2
2	93.9	105.8	-3.8	-1.5	97.8	108.6	-0.4	0.8	127.4	126.0	11.7	-6.9
3	108.1	105.4	-3.9	-0.4	110.9	108.6	-1.4	0.0	130.5	128.8	3.5	2.2
4	106.1	105.6	-4.3	0.2	106.8	106.9	-3.1	-1.6	136.0	133.9	18.7	4.0
5	110.0	107.5	0.2	1.8	110.7	109.1	-1.9	2.1	135.4	135.8	17.1	1.4
6	110.7	109.5	1.6	1.9	112.6	112.6	2.5	3.2	136.2	138.1	15.3	1.7
7	113.2	111.7	4.6	2.0	113.6	113.5	2.7	0.8	144.3	143.7	18.6	4.1
8	109.9	111.9	8.3	0.2	115.0	117.7	9.8	3.7	130.2	131.4	6.4	-8.6
9	104.2	108.7	4.5	-2.9	108.0	111.8	3.8	-5.0	128.5	132.6	7.4	0.9
10	119.6	113.1	6.2	4.0	120.8	114.6	5.4	2.5	135.1	135.9	12.6	2.5
11	115.3	112.9	6.3	-0.2	117.1	113.4	6.2	-1.0	134.9	137.9	12.9	1.5
12	115.4	114.8	6.4	1.7	116.4	113.9	5.9	0.4	140.0	139.4	9.4	1.1
2014.01	107.9	112.2	4.5	-2.3	112.3	116.5	8.2	2.3	147.3	142.7	5.5	2.4
2	102.0	110.7	4.6	-1.3	104.7	112.1	3.2	-3.8	144.3	141.2	12.1	-1.1
3	112.8	110.0	4.4	-0.6	116.0	113.7	4.7	1.4	141.4	139.9	8.6	-0.9
4	112.4	111.9	6.0	1.7	115.1	115.2	7.8	1.3	146.4	146.0	9.3	4.6
5	110.5	109.3	1.7	-2.3	111.4	111.2	1.9	-3.5	147.3	147.4	8.5	0.7
6	109.1	109.0	-0.5	-0.3	110.8	112.3	-0.3	1.0	147.4	148.4	7.5	0.7
7	115.6	114.0	2.1	4.6	116.2	115.9	2.1	3.2	150.8	150.0	4.4	1.1
8	111.1	114.4	2.2	0.4	113.4	117.3	-0.3	1.2	146.0	146.1	11.2	-2.6
9	110.0	113.4	4.3	-0.9	112.4	114.8	2.7	-2.1	148.7	154.5	16.5	5.7
10	115.7	109.4	-3.3	-3.5	117.9	111.9	-2.4	-2.5	140.6	141.4	4.0	-8.5
11	113.9	112.8	-0.1	3.1	117.3	115.3	1.7	3.0	137.2	139.3	1.0	-1.5

자료 : 통계청, 광업 · 제조업 동향 조사

기업경기전망(BSI)

(기준지수=100)

구 분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매출		자금사정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12.01	84	87	95	92	94	96	70	77	85	89	76	79
2	82	90	99	97	93	95	71	71	83	86	79	71
3	83	85	99	105	95	93	73	73	82	87	85	81
4	84	86	97	103	95	95	77	76	88	83	91	88
5	83	88	98	102	96	95	74	80	86	91	90	92
6	85	84	99	99	97	95	70	76	76	86	87	94
7	76	84	91	98	94	95	63	70	74	79	86	90
8	74	79	94	93	90	94	60	66	70	74	80	88
9	76	82	86	100	87	92	67	62	74	74	84	85
10	73	81	86	98	87	93	62	70	75	81	83	86
11	72	78	93	90	87	88	60	65	72	78	86	82
12	69	73	86	89	85	86	60	66	70	78	87	82
2013.01	72	73	87	87	83	82	64	70	69	79	82	86
2	72	74	90	84	87	83	61	64	67	74	80	82
3	80	78	93	85	87	89	66	66	74	75	77	82
4	84	83	98	88	85	89	63	73	78	78	80	82
5	84	85	102	96	93	93	70	71	81	78	84	87
6	87	83	97	103	95	94	64	73	74	84	75	87
7	79	82	93	99	96	98	70	67	78	76	82	80
8	80	76	91	92	89	95	74	70	83	79	81	84
9	81	80	86	94	92	92	73	77	82	82	79	83
10	81	83	95	93	89	94	70	76	78	81	76	89
11	87	84	103	100	93	92	78	73	90	80	81	84
12	84	86	95	103	94	96	79	81	93	86	82	88
2014.01	79	83	91	95	93	90	74	78	85	89	79	85
2	77	84	87	94	87	94	69	73	77	82	75	80
3	84	82	94	90	91	93	74	74	79	75	78	83
4	82	89	95	95	88	96	75	75	81	81	83	81
5	85	87	92	96	94	91	69	75	72	84	85	82
6	82	87	92	93	87	89	67	72	68	74	78	87
7	77	86	84	91	93	85	68	67	72	71	76	81
8	73	83	77	84	94	92	64	75	65	75	68	77
9	76	79	82	81	94	93	62	66	65	67	78	76
10	74	79	81	86	94	97	59	68	65	65	82	79
11	74	77	85	86	95	90	68	67	69	68	79	83
12	72	78	80	90	95	92	66	69	68	69	80	84
2015.01	—	76	—	85	—	91	—	67	—	68	—	81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마진		매입원가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11.10	69.7	102.2	71.2	104.9	71.3	96.6	140.0	105.5	72.8	91.7
11	63.5	93.2	65.5	91.9	60.4	93.0	131.1	118.4	65.0	86.3
12	59.7	87.3	66.6	85.7	68.9	91.2	132.8	114.4	69.5	89.5
2012.01	54.2	97.8	62.9	97.7	65.3	96.9	130.4	111.9	54.4	93.1
2	43.3	61.9	43.8	51.9	45.6	56.5	125.8	106.5	46.0	60.9
3	47.0	101.8	48.7	105.7	55.2	100.9	145.3	117.3	49.1	91.7
4	67.4	84.3	64.3	97.5	65.3	84.5	135.3	119.9	56.7	78.7
5	79.6	83.3	76.4	99.8	72.5	87.0	125.1	113.4	68.5	71.5
6	47.1	73.2	54.0	76.1	54.2	72.9	117.6	108.2	63.6	75.0
7	50.4	72.0	53.3	68.1	53.5	76.9	109.4	111.6	50.7	69.2
8	52.9	64.9	46.2	64.0	53.9	64.9	131.6	104.5	46.0	57.2
9	72.4	98.5	76.5	109.4	70.4	100.7	139.4	115.7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3.7	95.8	115.2	109.7	71.1	90.3
11	82.7	96.4	90.3	101.7	83.5	91.8	134.5	110.3	77.0	91.3
12	44.5	71.9	40.6	75.1	48.3	73.1	127.6	111.6	51.9	74.4
2013.01	41.9	72.0	38.9	66.6	51.3	72.6	137.2	123.5	49.8	76.4
2	52.9	104.1	50.9	110.4	58.4	101.3	130.2	122.6	59.9	96.4
3	59.1	101.7	55.4	108.6	54.7	100.0	115.0	104.6	54.1	100.7
4	58.8	100.8	61.2	105.3	66.7	95.7	114.3	105.2	62.4	97.6
5	69.6	96.6	66.9	102.7	62.4	94.6	106.6	96.9	68.3	92.4
6	53.6	77.5	57.2	81.4	55.4	87.6	115.3	104.0	59.6	80.7
7	49.4	78.6	49.7	72.8	56.2	78.7	120.4	121.3	58.3	75.4
8	53.9	72.5	53.2	79.4	55.6	68.3	124.5	115.1	54.2	68.7
9	84.6	105.5	82.2	116.3	75.5	104.4	124.0	121.8	74.6	96.5
10	55.4	88.7	58.3	92.5	68.6	91.6	107.8	98.1	57.6	96.2
11	79.9	105.9	87.9	111.2	86.5	98.7	110.2	109.4	76.3	97.0
12	55.5	78.6	58.5	74.3	66.6	75.2	115.3	110.8	66.1	76.3
2014.01	54.3	88.9	75	85.0	80	82.8	100	120.0	76.8	89.3
2	72.8	71.8	76.8	69.2	79.7	77.1	104.3	93.7	77.5	79.9
3	93.2	99.3	91.2	100	91.2	94.5	102.7	100.7	86.5	91.2
4	47.1	99.3	44.2	97.3	55.1	96	112.3	103.4	47.8	92.6
5	60.1	70.3	58.7	71	68.8	75.4	108.7	103.6	65.2	72.5
6	62.3	76.8	51.4	79.7	55.8	81.2	108.7	99.3	60.1	78.3
7	60.1	95.7	61.6	91.3	69.6	87.7	109.4	111.6	61.6	89.9
8	84.8	94.9	76.1	89.9	80.4	85.5	108.7	102.9	81.2	90.6
9	114.5	118.8	108.0	115.2	105.1	113.0	111.6	118.8	111.6	107.2
10	—	101.4	—	102.2	—	104.3	—	100.0	—	101.4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기동향조사(표본조정 관계로 2014.11월부터 일시 통계 발표 보류)

대형소매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불변지수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0	1,095,097	9.4	—	100	6.3	—
2011	1,450,812	32.5	—	126.9	26.9	—
2012	1,540,187	6.2	—	130.3	2.7	—
2013	1,612,209	4.7	—	133.8	2.8	—
2	116,618	7.2	-14.7	119.3	3.7	-14.8
3	124,630	10.9	6.9	126.9	6.8	6.4
4	119,552	7.2	-4.1	122.0	3.0	-3.9
5	127,364	5.1	6.5	129.4	0.8	6.1
6	117,048	-0.5	-8.1	118.9	-4.1	-8.1
7	128,184	2.7	9.5	131.6	0.8	10.7
8	123,597	8.3	-3.6	125.9	6.8	-4.3
9	135,939	6.5	10.0	135.0	2.3	7.2
10	127,452	2.5	-6.2	128.5	-1.5	-4.8
11	133,475	16.2	4.7	134.7	12.7	4.8
12	149,576	7.1	12.1	150.6	4.3	11.8
2013.01	127,349	-6.9	-14.9	127.2	-9.1	-15.5
2	128,784	10.4	1.1	128.4	7.6	0.9
3	135,450	8.7	5.2	135.9	7.1	5.8
4	120,308	0.6	-11.2	121.1	-0.7	-10.9
5	130,684	2.6	8.6	130.9	1.2	8.1
6	129,810	10.9	-0.7	130.6	9.8	-0.2
7	123,643	-3.5	-4.8	124.5	-5.4	-4.7
8	122,872	-0.6	-0.6	122.5	-2.7	-1.6
9	152,593	12.3	24.2	150.2	11.3	22.6
10	136,247	6.9	-10.7	135.1	5.1	-10.1
11	149,268	11.8	9.6	146.6	8.8	8.5
12	155,201	3.8	4.0	152.7	1.4	4.2
2014.01	150,080	17.8	-3.3	147.6	16.0	-3.3
2	120,309	-6.6	-19.8	117.9	-8.2	-20.1
3	140,645	3.8	16.9	137.2	1.0	16.4
4	121,138	0.7	-13.9	118.5	-2.1	-13.6
5	250,016	7.1	15.6	136.7	4.4	15.4
6	136,540	5.2	-2.5	133.6	2.3	-2.3
7	132,596	7.2	-2.9	129.9	4.3	-2.8
8	145,880	18.7	10.0	142.6	16.4	10.6
9	150,210	-1.6	3.0	145.6	-3.1	2.1
10	144,980	6.4	-3.5	141.5	4.7	-2.8
11	151,522	1.5	4.5	147.5	0.6	4.2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 · 도소매판매동향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1.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6	886,775	30,788	2,427	635,705	49,457	198,684	2,929
7	849,209	-10,028	-37,566	609,179	47,178	190,024	2,828
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2	861,777	-15,277	2,456	620,903	46,796	191,142	2,936
3	864,711	-14,839	2,934	623,471	46,798	191,486	2,956
4	868,178	-13,738	3,467	626,387	46,884	191,914	2,993
5	870,741	-13,607	2,563	628,480	46,930	192,325	3,006
6	873,672	-13,103	2,931	630,864	46,956	192,837	3,015
7	876,401	27,192	2,729	633,075	47,103	193,183	3,040
8	878,633	30,330	2,232	635,145	47,093	193,335	3,060
9	880,749	30,437	2,116	637,043	47,046	193,591	3,069
10	884,235	31,607	3,486	640,088	47,005	194,051	3,091
11	886,545	31,223	2,310	642,066	46,935	194,427	3,117
12	887,083	31,332	538	642,682	46,815	194,441	3,145
2014.01	891,707	32,386	4,624	646,621	46,855	195,075	3,156
2	894,883	33,106	3,176	649,447	46,785	195,474	3,177
3	898,671	33,960	3,788	652,673	46,755	196,048	3,195
4	902,024	33,846	3,353	655,703	46,663	196,457	3,201
5	905,364	34,623	3,340	658,608	46,574	196,980	3,202
6	908,201	34,529	2,837	661,040	46,490	197,446	3,225
7	911,243	34,842	3,042	663,412	46,565	198,015	3,251
8	913,675	35,042	2,432	665,648	46,454	198,305	3,268
9	916,703	35,954	3,028	668,265	46,406	198,734	3,298
10	919,699	35,464	2,996	670,987	46,374	199,020	3,318
11	922,856	36,311	3,157	673,722	46,271	199,524	3,339
12	924,651	37,568	1,795	675,335	46,110	199,842	3,364

자료 : 충청남도,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3	107.8	1.2	107.3	0.6	109.3	-3.5	107.9	1.2	107.1	1.2	108.2	1.3
2014	108.3	0.5	107.1	-0.2	97.0	-11.2	108.4	0.5	108.0	0.8	108.3	0.1
2012.03	106.3	2.7	106.7	2.4	114.8	3.8	106.3	2.8	105.8	1.9	106.6	2.6
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8	2.1	106.7	2.8
5	106.8	3.0	107.1	3.1	116.5	16.2	106.8	3.1	106.3	2.3	106.9	2.8
6	106.7	2.7	106.9	2.6	109.9	10.9	106.7	2.8	105.8	1.7	106.8	2.3
7	106.3	1.8	106.3	1.6	109.0	3.0	106.4	2.0	105.6	1.0	106.5	1.6
8	106.6	1.3	106.6	0.7	113.3	-2.9	106.7	1.5	105.7	0.6	106.7	1.3
9	107.4	2.3	107.8	2.0	123.7	10.1	107.5	2.5	106.6	1.5	107.5	2.1
10	107.2	2.4	107.3	2.0	119.0	15.0	107.3	2.5	106.5	1.7	107.3	1.9
11	106.8	2.0	106.6	1.5	109.9	10.0	106.8	2.1	106.1	1.2	106.9	1.6
12	107.0	1.9	106.8	1.3	112.9	14.1	107.1	2.2	106.2	1.1	107.1	1.5
2013.01	107.6	2.0	107.5	1.7	118.7	12.0	107.7	2.1	106.8	1.5	107.7	1.7
2	107.8	1.8	107.8	1.6	120.1	9.1	107.8	1.9	107.1	1.4	108.1	1.6
3	107.8	1.4	107.7	0.9	117.8	2.6	107.9	1.5	107.1	1.2	108.0	1.3
4	107.7	1.1	107.4	0.5	116.1	2.3	107.7	1.2	106.9	1.0	107.9	1.1
5	107.7	0.8	107.0	-0.1	111.3	-4.5	107.7	0.8	106.9	0.6	108.1	1.1
6	107.6	0.9	106.8	-0.1	104.7	-4.8	107.6	0.8	106.9	1.0	107.9	1.0
7	107.7	1.3	106.8	0.6	105.3	-3.4	107.7	1.2	107.1	1.5	108.0	1.5
8	108.1	1.4	107.7	1.1	112.7	-0.6	108.1	1.3	107.6	1.8	108.6	1.8
9	108.4	0.9	108.0	0.2	110.4	-10.7	108.4	0.9	107.7	1.0	108.7	1.1
10	107.9	0.7	107.2	-0.1	101.2	-14.9	107.9	0.6	107.2	0.7	108.4	1.1
11	107.9	1.0	107.0	0.4	96.1	-12.5	107.9	1.0	107.2	1.0	108.3	1.3
12	107.9	0.9	107.1	0.2	97.4	-13.8	107.9	0.8	107.3	1.0	108.3	1.2
2014.01	108.6	0.9	108.0	0.4	101.3	-14.7	108.6	0.8	107.9	1.1	108.8	1.0
2	108.7	0.8	108.1	0.4	102.6	-14.6	108.7	0.8	108.3	1.2	108.8	0.7
3	108.3	0.4	107.2	-0.4	100.2	-15.0	108.3	0.4	107.8	0.7	108.3	0.3
4	108.3	0.6	107.2	-0.2	98.9	-14.8	108.3	0.6	107.9	0.9	108.3	0.3
5	108.5	0.8	107.3	0.2	98.7	-12.1	108.6	0.8	108.3	1.3	108.4	0.3
6	108.4	0.8	107.1	0.3	93.8	-10.4	108.4	0.8	108.3	1.3	108.2	0.3
7	108.4	0.7	107.1	0.2	92.9	-11.8	108.4	0.7	108.1	0.9	108.4	0.4
8	108.5	0.3	107.0	-0.7	96.6	-14.2	108.4	0.3	108.3	0.7	108.6	0.0
9	108.4	0.0	107.1	-0.9	98.3	-11.0	108.4	0.0	108.2	0.5	108.5	-0.2
10	108.3	0.3	106.9	-0.3	94.7	-6.5	108.4	0.5	107.8	0.5	107.9	-0.4
11	107.9	0.0	106.4	-0.6	92.5	-3.8	108.1	0.2	107.5	0.3	107.6	-0.7
12	107.9	0.0	104.1	-0.9	95.0	-2.4	108.1	0.1	107.2	0.0	107.5	-0.8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2	61,752	3.0	—	33,161	-1.4	—	28,592
2013	64,282	4.1	—	32,922	-0.7	—	31,359
2014	65,143	1.3	—	33,133	0.6	—	32,009
3	5,135	5.4	6.4	2,804	-1.1	-9.5	2,331
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5	5,061	0.8	6.7	3,116	12.0	4.8	1,945
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7	5,099	0.2	1.8	2,363	-16.4	-14.5	2,736
8	5,017	1.9	-1.6	2,432	-15.2	2.9	2,585
9	5,529	1.7	10.2	2,951	-8.5	21.3	2,578
10	5,860	6.4	6.0	2,319	-18.2	-21.4	3,541
11	5,676	13.6	-3.1	2,794	1.9	20.5	2,882
12	5,235	-1.7	-7.8	2,764	-5.4	-1.1	2,471
2013.01	5,236	14.7	0.0	2,817	1.3	1.9	2,419
2	5,031	4.2	-3.9	2,770	-10.6	-1.7	2,261
3	5,426	5.7	7.9	3,026	7.9	9.2	2,400
4	4,898	3.3	-9.7	2,777	-6.6	-8.2	2,121
5	5,224	3.2	6.7	2,380	-23.6	-14.3	2,844
6	4,994	-0.3	-4.4	2,873	4.0	20.7	2,121
7	5,228	2.5	4.7	2,720	15.1	-5.3	2,508
8	5,501	9.6	5.2	2,543	4.6	-6.5	2,958
9	5,636	1.9	2.5	2,655	-10.0	4.4	2,981
10	6,146	4.9	9.0	2,783	20.0	4.8	3,363
11	5,497	-3.2	-10.6	2,725	-2.5	-2.1	2,772
12	5,464	4.4	-0.6	2,853	3.2	4.7	2,611
2014.01	5,165	-1.4	-5.5	2,784	-1.2	-2.4	2,381
2	4,920	-2.2	-4.7	2,828	2.1	1.6	2,092
3	5,602	3.2	13.9	2,484	-17.9	-12.2	3,118
4	5,222	6.6	-6.8	2,605	-6.2	4.9	2,617
5	5,341	2.2	2.3	2,924	22.9	12.2	2,417
6	5,518	10.5	3.3	2,642	-8.0	-9.6	2,876
7	5,360	2.5	-2.9	2,979	9.5	12.8	2,381
8	5,417	-1.5	1.1	3,064	20.5	2.9	2,353
9	5,731	1.7	5.8	2,913	9.7	-4.9	2,818
10	5,887	-4.2	2.7	2,805	0.8	-3.7	3,082
11	5,398	-1.8	-8.3	2,405	-11.7	-14.3	2,993
12	5,582	2.2	3.4	2,695	-5.5	12.1	2,8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지자체수출입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3	1,170	8.3	702	468	64.6	1.7	77.3	51.8
2014	1,197	2.4	717	481	64.6	0.0	76.8	52.2
2012.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2	1,047	7.4	630	417	58.9	0.9	70.9	46.9
3	1,135	9.1	690	446	63.5	1.8	77.1	49.9
4	1,186	8.2	706	480	66.1	1.5	78.5	53.6
5	1,215	9.2	726	490	67.3	2.0	80.2	54.4
6	1,223	9.2	725	498	67.4	2.1	79.6	55.1
7	1,228	8.7	735	493	67.4	1.9	80.3	54.4
8	1,210	8.9	722	489	66.3	2.1	78.7	53.7
9	1,216	8.7	720	496	66.5	2.1	78.4	54.4
10	1,208	7.1	724	484	65.9	1.2	78.6	53.1
11	1,204	7.8	726	478	65.6	1.8	78.8	52.3
12	1,137	7.8	697	440	61.8	1.9	75.4	48.1
2014.01	1,115	8.3	684	431	60.6	2.4	73.9	47.1
2	1,134	8.4	694	440	61.5	2.6	74.9	48.0
3	1,182	4.1	710	472	64.0	0.5	76.5	51.4
4	1,215	2.5	724	492	65.8	-0.3	77.9	53.6
5	1,222	0.6	723	499	66.1	-1.2	77.7	54.3
6	1,234	0.9	727	507	66.6	-0.8	78.0	55.1
7	1,240	1.0	736	504	66.8	-0.9	78.8	54.7
8	1,222	1.0	724	498	65.8	-0.5	77.4	53.9
9	1,233	1.4	731	502	66.2	-0.3	78.1	54.2
10	1,228	1.6	727	501	65.8	-0.1	77.5	54.1
11	1,218	1.2	727	491	65.2	-0.4	77.3	52.9
12	1,131	-0.5	693	438	60.4	-1.4	73.6	4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3	1,137	7.7	11	167	234	276	134	106	67	143
2014	1,158	1.8	11	173	237	275	139	112	69	142
2012.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2	1,003	6.9	9	150	222	262	127	94	53	87
3	1,101	8.5	11	165	230	268	136	101	60	130
4	1,157	8.2	11	172	234	276	137	104	69	154
5	1,180	7.9	13	175	235	276	137	107	70	167
6	1,186	8.8	12	175	239	279	135	107	71	168
7	1,194	8.1	16	175	242	280	134	109	73	165
8	1,180	8.4	14	165	239	281	135	113	72	162
9	1,184	7.7	10	163	240	282	139	114	73	164
10	1,177	6.0	9	161	237	284	137	111	72	166
11	1,176	7.1	10	170	238	281	138	109	71	158
12	1,106	7.3	12	171	238	279	130	108	61	108
2014.01	1,072	7.2	16	168	236	272	132	101	61	87
2	1,076	7.3	11	171	232	275	133	103	63	89
3	1,143	3.8	10	174	233	279	139	109	68	132
4	1,176	1.6	9	172	234	279	137	113	70	162
5	1,179	-0.1	11	169	237	274	138	116	71	164
6	1,194	0.7	11	170	237	278	140	117	74	165
7	1,199	0.4	14	179	238	278	140	117	73	162
8	1,177	-0.2	13	167	239	273	139	113	73	160
9	1,196	1.0	12	177	241	277	140	114	72	164
10	1,192	1.3	8	179	240	275	141	114	73	162
11	1,188	1.0	10	179	239	275	143	115	69	159
12	1,098	-0.7	12	175	234	271	141	108	64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구 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1	1,001	2.8	163	204	64	177	297	97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3	1,137	7.7	166	247	76	199	353	96
2014	1,158	1.8	161	250	67	197	382	101
2012.05	1,094	4.6	188	209	70	199	330	99
6	1,090	3.1	186	205	71	202	329	98
7	1,104	7.5	188	212	67	213	331	94
8	1,088	6.8	188	212	70	209	319	91
9	1,099	8.2	194	219	72	195	332	88
10	1,110	6.9	189	217	75	207	331	90
11	1,097	7.3	185	225	70	204	327	87
12	1,031	6.9	116	228	73	199	330	86
2013.01	1,001	7.6	94	230	68	205	317	87
2	1,003	6.9	95	233	67	195	324	89
3	1,101	8.5	151	250	77	191	342	90
4	1,157	8.2	182	256	83	191	350	96
5	1,180	7.9	197	253	82	200	354	94
6	1,186	8.8	200	247	83	205	359	93
7	1,194	8.1	198	247	81	210	360	99
8	1,180	8.4	196	250	75	197	365	96
9	1,184	7.7	199	246	77	201	362	100
10	1,177	6.0	195	247	74	197	364	100
11	1,176	7.1	179	252	74	203	366	101
12	1,106	7.3	108	253	74	199	371	101
2014.01	1,072	7.2	97	255	72	199	352	98
2	1,076	7.3	101	249	67	200	359	101
3	1,143	3.8	146	256	61	195	383	103
4	1,176	1.6	179	246	62	195	388	105
5	1,179	-0.1	190	247	61	189	391	102
6	1,194	0.7	197	257	61	192	385	103
7	1,199	0.4	191	252	63	200	389	104
8	1,177	-0.2	188	243	64	194	387	102
9	1,196	1.0	192	243	69	194	393	101
10	1,192	1.3	189	245	70	200	387	101
11	1,188	1.0	170	249	75	206	389	99
12	1,098	-0.7	93	249	78	203	377	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 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3	2.8	0.5	3.0	2.6	33	33.3	21	12
2014	3.4	0.6	3.2	3.6	40	22.6	23	18
2012.05	1.8	0.1	1.5	2.2	20	8.8	10	10
6	2.6	0.9	2.5	2.7	29	56.2	17	12
7	2.2	-0.1	2.2	2.1	25	3.3	15	10
8	2.1	-0.2	2.2	2.0	24	-0.4	15	9
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01	2.8	-0.1	2.6	3.2	29	1.8	16	13
2	4.2	0.4	3.8	4.8	44	19.6	24	20
3	3.0	0.5	3.4	2.3	34	31.8	23	10
4	2.5	0.0	2.5	2.4	29	7.7	18	12
5	2.9	1.1	3.2	2.5	36	79.3	24	12
6	3.0	0.4	3.5	2.2	37	26.3	25	11
7	2.8	0.6	3.3	2.0	34	36.1	24	10
8	2.5	0.4	2.7	2.3	31	30.5	20	11
9	2.6	0.9	2.8	2.2	31	63.0	21	11
10	2.6	1.0	2.8	2.3	31	71.6	20	11
11	2.4	0.6	2.3	2.4	29	43.2	17	12
12	2.7	0.5	2.8	2.5	30	31.7	19	11
2014.01	3.8	1.0	3.8	3.8	42	47.4	26	17
2	5.1	0.9	4.8	5.5	58	31.9	34	24
3	3.2	0.2	3.2	3.3	38	13.7	23	15
4	3.2	0.7	3.6	2.8	40	34.4	26	14
5	3.5	0.6	3.1	4.1	43	21.4	23	20
6	3.2	0.2	3.0	3.6	40	9.0	22	18
7	3.3	0.5	3.0	3.7	41	20.1	22	19
8	3.7	1.2	3.3	4.3	45	46.8	24	21
9	3.0	0.4	2.7	3.4	37	17.9	20	17
10	3.0	0.4	2.6	3.4	36	15.6	19	17
11	2.5	0.1	2.4	2.7	30	6.7	17	13
12	2.9	0.2	2.7	3.2	33	7.3	18	14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 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1.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7,16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3.01	182,827	299,436	482,263	247,947	156,711	404,658
2	186,423	299,016	485,439	249,281	156,559	405,840
3	186,938	300,107	487,045	250,243	156,586	406,829
4	190,279	300,406	490,685	251,679	156,791	408,470
5	192,378	300,785	493,163	253,511	156,810	410,321
6	190,473	302,674	493,147	256,242	157,639	413,881
7	192,959	302,487	495,446	256,198	158,514	414,712
8	196,348	302,543	498,891	257,433	159,174	416,607
9	195,204	304,735	499,939	257,916	159,768	417,684
10	196,636	308,929	505,565	261,607	159,850	421,457
11	196,964	309,754	506,718	263,302	160,698	424,000
12	194,530	312,254	506,784	264,454	162,765	427,219
10	196,998	314,714	511,712	265,691	162,809	428,500
11	200,396	313,335	513,731	268,637	162,974	431,611
12	194,530	312,254	506,784	264,454	162,765	427,219
2014.01	196,998	314,714	511,712	265,691	162,809	428,500
2	200,396	313,335	513,731	268,637	162,974	431,611
3	201,752	313,681	515,433	270,263	163,686	433,949
4	201,301	314,847	516,148	272,835	164,935	437,770
5	204,198	315,910	520,108	275,112	166,006	441,118
6	206,769	317,040	523,809	277,069	167,806	444,875
7	207,549	316,097	523,646	278,788	170,035	448,823
8	210,089	316,697	526,786	281,410	171,148	452,558
9	208,572	318,357	526,929	283,591	172,082	455,673
10	207,024	323,074	530,098	289,714	173,017	462,731
11	209,259	325,569	534,828	293,502	173,597	467,099

자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부도율

(단위 : 전자결제조정전 %, %p, 억원, 개)

구 분	지역별어음부도율						부도 금액	부도 업체수	신규 법인수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2.01	0.18	0.21	0.00	0.48	0.00	0.00	23.2	0	207
2	0.15	0.23	0.00	0.05	0.00	0.02	20.2	3	254
3	0.13	0.34	0.05	0.00	0.00	0.00	17.4	2	226
4	0.20	0.20	0.00	0.00	0.14	0.00	28.1	0	206
5	0.57	0.27	0.00	0.00	0.29	0.00	70.7	3	180
6	0.37	0.23	0.00	0.01	0.34	0.00	36.7	3	218
7	0.21	0.09	0.54	0.07	1.79	0.01	25.4	1	213
8	0.19	0.10	0.11	0.02	0.16	0.01	19.8	3	215
9	0.32	0.19	0.00	0.00	1.20	0.03	31.5	3	209
10	0.25	0.32	0.10	0.01	0.31	0.00	29.7	3	203
11	0.75	1.83	0.00	0.01	0.22	0.00	81.3	3	216
12	1.18	1.39	0.19	0.00	0.86	0.00	171.1	2	193
2013.01	0.97	2.18	1.09	0.00	1.06	0.02	107.1	2	248
2	0.11	0.20	0.00	0.00	0.00	0.00	12.2	0	218
3	0.63	1.41	0.00	0.00	0.50	0.00	71.7	1	230
4	0.11	0.07	0.11	0.00	1.12	0.00	13.8	1	244
5	0.12	0.16	0.00	0.00	0.30	0.00	12.8	2	220
6	0.04	0.01	0.00	0.00	0.02	0.00	3.8	1	215
7	0.73	0.53	0.00	0.00	0.07	0.03	79.1	5	282
8	0.23	0.16	0.08	0.01	0.00	0.00	18.2	5	226
9	0.17	0.19	0.08	0.00	0.00	0.00	16.1	3	162
10	0.07	0.06	0.00	0.00	0.00	0.00	6.6	0	238
11	0.04	0.03	0.06	0.04	0.00	0.03	4.4	0	162
12	0.08	0.14	0.08	0.00	0.00	0.04	8.7	0	247
2014.01	0.03	0.07	0.00	0.00	0.00	0.00	2.4	2	251
2	1.39	0.07	0.00	0.00	0.00	0.00	152.6	1	246
3	0.09	0.10	0.00	0.00	0.00	0.00	10.2	0	269
4	0.19	0.20	0.01	0.14	0.00	0.00	21.4	1	236
5	3.43	0.01	41.34	0.00	0.00	0.00	331.0	1	228
6	4.99	4.14	39.77	0.00	0.00	0.00	563.7	0	239
7	0.04	0.01	0.14	0.00	0.00	0.00	3.5	2	311
8	0.08	0.09	0.02	0.00	0.00	0.03	7.1	0	225
9	0.65	1.66	0.09	0.79	0.00	0.00	69.5	2	235
10	0.29	0.60	0.00	1.24	0.00	0.00	29.7	0	256
11	0.23	0.55	0.00	0.66	0.00	0.00	22.8	0	238

자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호수)

구 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호수	전년동 월(기)비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7,471	-17.2
2012	9,794,659	-1.9	7,979,081	-10.3	167,889	-13.0	5,596	-60.6
2013	8,674,931	-12.9	7,896,601	-1.0	172,585	2.7	2,657	-110.6
2014	9,026,835	3.9	7,981,867	1.1	173,751	2.4	-	-
2012.03	1,165,607	91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723	-42.6	15,102	-23.5	2,942	-60.6
2013.01	462,034	-17.3	405,866	-20.0	14,348	14.1	2,691	-62.4
2	596,566	-16.5	516,833	-49.5	12,329	-13.2	2,563	-62.0
3	780,044	-33.1	600,473	-27.1	15,250	-19.4	2,697	-58.5
4	767,159	-6.1	636,554	-41.3	17,795	18.7	2,555	-58.7
5	874,153	5.6	565,109	-5.1	15,637	12.2	2,351	-61.2
6	793,231	-16.4	471,464	-46.6	12,554	-28.4	2,961	-51.9
7	608,787	15.1	477,506	0.4	13,264	9.8	2,565	-57.5
8	966,712	10.0	1,228,153	96.6	12,931	23.5	2,321	-61.1
9	841,477	16.9	866,764	97.0	9,945	7.5	2,346	-62.1
10	760,401	57.6	1,426,420	225.8	14,058	4.2	2,007	-51.6
11	485,898	-26.3	365,483	-43.6	11,699	-23.6	3,265	6.4
12	738,469	-50.5	335,976	-23.1	22,775	50.8	3,566	21.2
2014.01	339,091	-26.6	259,653	-36.0	13,221	-7.9	3,204	19.1
2	475,423	-20.3	380,747	-26.3	15,990	29.7	2,741	6.9
3	803,818	3.0	923,800	53.8	16,739	9.8	2,260	-16.2
4	878,914	14.6	666,087	4.6	16,742	-5.9	1,878	-26.5
5	723,478	-17.2	604,244	6.9	13,785	-11.8	1,587	-32.5
6	1,178,697	48.6	745,028	58.0	12,916	2.9	1,353	-54.3
7	608,031	-0.1	599,714	25.6	15,077	13.7	1,816	-29.2
8	1,430,976	48.0	419,954	-65.8	12,705	-1.7	2,095	-9.7
9	556,713	-33.8	1,211,671	39.8	12,371	24.4	1,525	-35.0
10	720,529	-5.2	754,324	-47.1	13,491	-4.0	2,676	33.3
11	609,420	25.4	996,314	172.6	15,100	29.1	2,338	-28.4
12	701,745	-5.0	420,331	25.1	18,614	-18.3	-	-

자료 : 청남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토지거래현황,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 %)

구 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1.11	92.6	8.1	1.0	89.6	100.3	93.5	88.5	12.1	1.5	84.4	98.3	91.9
12	93.0	8.4	0.4	90.1	100.3	93.5	89.0	12.3	0.6	85.1	98.3	91.9
2012.01	93.4	8.8	0.5	90.8	100.1	93.5	89.6	12.7	0.6	86.0	98.4	91.9
2	93.8	8.9	0.4	91.4	100.1	93.7	90.1	12.5	0.6	86.7	98.4	91.9
3	94.4	8.8	0.6	92.2	100.2	94.0	90.8	12.0	0.8	87.7	98.4	92.4
4	95.3	8.8	1.0	93.5	100.3	94.2	91.9	11.8	1.2	89.3	98.4	92.7
5	95.8	8.5	0.5	94.2	100.2	94.4	92.4	11.5	0.6	90.1	98.3	93.0
6	96.3	8.6	0.6	94.9	100.2	95.3	92.9	11.5	0.5	90.6	98.6	93.6
7	97.0	8.5	0.7	95.7	100.3	95.7	93.8	11.5	1.0	91.7	98.9	94.7
8	97.3	8.0	0.4	96.1	100.4	96.4	94.3	10.7	0.5	92.2	99.2	95.8
9	97.8	7.6	0.5	96.8	100.5	97.1	95.0	10.2	0.8	93.1	99.4	96.4
10	98.3	7.2	0.5	97.5	100.4	97.6	95.9	10.1	0.9	94.4	99.4	97.2
11	99.0	6.8	0.7	98.4	100.5	98.2	97.4	10.1	1.6	96.6	99.4	97.6
12	99.3	6.8	0.3	98.9	100.3	98.6	98.1	10.3	0.7	97.7	99.2	98.1
2013.01	99.5	6.5	0.2	99.2	100.3	98.9	98.9	10.5	0.8	98.7	99.7	98.4
2	99.8	6.4	0.3	99.7	100.2	99.5	99.3	10.2	0.4	99.2	99.8	99.1
3	100.0	5.9	0.2	100.0	100.0	100.0	100.0	10.2	0.7	100.0	100.0	100.0
4	100.3	5.2	0.3	100.4	100.0	100.2	100.4	9.2	0.4	100.5	100.1	100.1
5	100.4	4.8	0.1	100.6	100.0	101.1	100.6	8.8	0.2	100.7	100.1	101.1
6	100.6	4.5	0.2	100.8	99.9	101.7	100.9	8.6	0.3	101.1	100.1	101.9
7	100.8	4.0	0.2	101.1	99.8	101.8	101.2	7.9	0.3	101.6	100.0	102.0
8	100.8	3.6	0.0	101.3	99.6	101.9	101.5	7.6	0.3	101.8	100.3	102.7
9	101.0	3.2	0.2	101.6	99.5	102.3	101.9	7.2	0.4	102.4	100.4	104.5
10	101.6	3.3	0.6	102.1	100.1	103.9	103.2	7.6	1.3	103.6	101.4	106.3
11	102.1	3.2	0.5	102.6	100.4	104.1	104.0	6.8	0.8	104.4	102.1	106.5
12	102.6	3.4	0.5	103.4	100.5	104.5	105.1	7.1	1.1	106.1	102.3	106.8
2014.01	102.8	3.4	0.2	103.6	100.6	104.9	105.7	6.8	0.6	106.9	102.5	107.3
2	103.2	3.4	0.4	104.0	100.8	105.2	106.2	7.0	0.5	107.7	102.6	107.7
3	103.5	3.5	0.3	104.4	100.9	105.9	106.9	6.9	0.6	108.5	102.8	109.2
4	103.8	3.5	0.3	104.8	100.9	106.6	107.2	6.9	0.3	109.0	102.7	109.5
5	104.0	3.6	0.2	105.0	100.9	106.9	107.4	6.8	0.2	109.3	102.7	109.9
6	104.3	3.7	0.3	105.5	101.0	107.0	107.7	6.8	0.3	109.7	102.8	110.1
7	104.6	3.8	0.2	105.9	101.0	107.0	108.1	6.9	0.4	110.1	103.1	110.2
8	104.8	3.9	0.2	106.2	101.0	107.0	108.4	6.9	0.3	110.5	103.2	110.3
9	105.1	4.1	0.3	106.7	100.9	107.7	108.8	6.7	0.3	111.0	103.2	110.4
10	105.4	3.7	0.3	107.1	101.0	107.9	109.0	5.7	0.2	111.3	103.3	110.7
11	105.6	3.4	0.1	107.3	100.9	108.1	109.1	4.9	0.1	111.5	103.2	111.1
12	105.8	3.1	0.2	107.5	101.0	108.4	109.3	4.1	0.2	111.7	103.4	111.6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 주요 해외경제지표

(단위: %)

구 분	미국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BOP)	수입 (BO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2011	3.3	7.4	3.2	16.2	15.5	13.9	17.1	5.4	20.3	24.9
2012	3.8	5.2	2.1	4.2	2.9	10.0	14.3	2.6	7.9	4.3
2013	2.9	4.1	1.5	2.0	-0.4	9.7	13.1	2.6	7.8	7.2
2014	4.2	4.0	1.6	-	-	8.3	12.0	2.0	-	-
212.08	-0.6	1.3	0.5	-1.3	-0.1	8.9	13.2	0.6	2.7	-2.5
9	0.3	1.1	0.5	4.2	0.8	9.2	14.2	0.3	9.9	2.4
10	-0.1	-0.1	0.2	-4.5	-1.8	9.6	14.5	-0.1	11.5	2.3
11	1.0	0.4	-0.2	1.6	3.6	10.1	14.9	0.1	2.8	0.1
12	0.1	0.3	0.0	2.5	-2.7	10.3	15.2	0.8	14.0	6.3
2013.01	0.1	0.7	0.1	-1.7	1.3	-	-	1.0	25.0	29.6
2	0.6	1.0	0.6	0.6	0.1	9.9	12.3	1.1	21.8	-15.0
3	0.4	-0.9	-0.2	-0.7	-3.1	8.9	12.6	-0.9	10.0	14.2
4	-0.2	0.0	-0.2	0.6	2.1	9.3	12.8	0.2	14.6	16.6
5	0.1	0.6	0.2	-0.8	1.9	9.2	12.9	-0.6	0.9	-0.5
6	0.2	0.5	0.3	2.3	-2.8	8.9	13.3	0.0	-3.1	-0.8
7	-0.2	0.6	0.2	-0.4	1.3	9.7	13.2	0.1	5.1	10.9
8	0.6	-0.3	0.1	0.0	0.3	10.4	13.4	0.5	7.1	7.2
9	0.7	0.4	0.1	-0.3	1.3	10.2	13.3	0.8	-0.4	7.5
10	0.1	0.6	0.0	2.8	0.0	10.3	13.3	0.1	5.6	7.5
11	0.6	0.1	0.1	0.4	-1.2	10.0	13.7	-0.1	12.7	5.3
12	0.2	0.5	0.2	-1.9	-0.4	9.7	13.6	0.3	4.1	8.3
2014.01	-0.2	-1.3	0.1	-0.5	1.2	-	-	1.0	10.5	9.9
2	0.9	0.9	0.1	-2.4	-1.2	8.6	11.8	0.5	-18.1	9.8
3	0.8	1.5	0.2	4.0	3.9	8.8	12.2	-0.5	-6.6	-11.5
4	0.1	0.6	0.3	-0.4	1.3	8.7	11.9	-0.3	0.8	0.7
5	0.5	0.4	0.4	1.4	-0.3	8.8	12.5	0.1	7.1	-1.6
6	0.4	0.4	0.3	-0.2	-1.4	9.2	12.4	-0.1	7.2	5.4
7	0.3	0.3	0.1	1.7	0.7	9.0	12.2	0.1	14.5	-1.6
8	-0.1	0.6	-0.2	0.0	0.1	6.9	11.9	0.2	9.4	-2.3
9	0.9	-0.1	0.1	-2.1	0.0	8.0	11.6	0.5	15.3	7.0
10	0.0	0.3	0.0	1.9	0.7	7.7	11.5	0.0	11.6	4.6
11	1.3	0.4	-0.3	-1.3	-2.6	7.2	11.7	-0.2	4.7	-6.6
12	-0.1	-0.9	-0.4	-	-	7.9	11.9	0.3	9.5	-2.3

주: (미국)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산업생산(2007=100)

(중국) 물가는 전기대비, 기타 전년동기대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2월은 1~2월 누계치임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제2015-4호)

(단위 : %)

구 분	일본					유로지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2011	-2.8	-1.0	-0.3	-2.7	12.1	3.4	-0.8	2.7	13.6	13.6
2012	0.6	1.8	0.0	-2.7	3.8	-2.5	-1.7	2.5	7.5	1.6
2013	-0.8	1.0	0.4	9.5	14.9	-0.7	-0.8	1.4	0.8	-3.0
2014	-	-	-	-	-	-	-	0.4	-	-
2012.04	-0.5	0.0	0.1	7.9	8.0	-0.8	-1.4	0.5	-1.0	-1.6
5	-1.8	0.7	-0.3	10.0	9.3	0.8	0.3	-0.1	0.7	-0.1
6	-0.8	-0.7	-0.5	-2.3	-2.2	-0.9	0.4	-0.1	1.7	-0.2
7	-0.5	-0.4	-0.3	-8.1	2.3	0.7	-0.2	-0.5	-1.3	-0.3
8	-1.4	-0.1	0.1	-5.8	-5.2	0.7	0.2	0.4	3.1	1.9
9	-2.2	-0.6	0.1	-10.3	4.2	-1.8	-1.2	0.7	-1.5	-2.9
10	0.3	-0.1	0.0	-6.5	-1.5	-0.7	-0.3	0.2	-1.1	0.9
11	-1.0	0.5	-0.4	-4.1	0.9	-0.8	-0.1	-0.2	0.2	-0.8
12	1.4	0.0	0.0	-5.8	1.9	0.6	-0.1	0.4	-1.3	-2.3
2013.01	-0.7	0.1	0.0	6.3	7.1	-0.4	0.3	-1.0	1.9	2.6
2	0.9	1.0	-0.2	-2.9	11.8	0.3	-0.2	0.4	-1.2	-1.6
3	0.3	-0.8	0.2	1.1	5.4	0.9	-0.1	1.2	3.6	-1.4
4	0.6	0.3	0.3	3.8	9.4	-0.1	-0.2	-0.1	-1.0	1.1
5	2.1	0.8	0.1	10.1	10.0	-0.2	1.1	0.1	-2.6	-2.0
6	-2.8	0.2	0.0	7.4	11.7	0.4	-1.0	0.1	2.0	2.6
7	2.7	-1.5	0.2	12.2	19.7	-0.9	1.0	-0.5	-2.0	-0.6
8	-0.5	1.6	0.3	14.6	16.2	1.2	-0.1	0.1	1.7	0.6
9	1.5	1.0	0.3	11.4	16.7	-0.2	-0.2	0.5	-0.1	-0.2
10	0.6	-0.3	0.1	18.6	26.3	-0.5	-0.3	-0.1	0.0	-0.3
11	0.3	1.1	0.0	18.4	21.2	1.5	0.9	-0.1	0.2	-1.3
12	0.5	-0.6	0.1	15.3	24.8	-0.4	-0.8	0.3	-1.4	-0.6
2014.01	3.9	1.6	-0.2	9.5	25.1	0.1	0.7	-1.1	1.6	2.0
2	-2.3	0.3	0.0	9.8	9.0	0.1	0.3	0.3	1.2	0.1
3	0.7	6.4	0.3	1.8	18.2	-0.5	0.0	0.9	-0.7	-0.3
4	-2.8	-13.6	2.1	5.1	3.4	1.1	0.0	0.2	-0.1	-0.4
5	0.7	4.6	0.4	-2.7	-3.5	-1.0	0.2	-0.1	0.8	0.6
6	-3.4	0.5	-0.1	-1.9	8.5	-0.2	0.4	0.1	-0.6	0.6
7	0.4	-0.5	0.0	3.9	2.4	0.8	-0.3	-0.7	0.6	0.8
8	-1.9	1.9	0.2	-1.3	-1.4	-1.2	0.6	0.1	-1.4	-3.1
9	2.9	2.8	0.2	6.9	6.3	0.5	-0.9	0.4	4.3	2.9
10	0.4	-1.4	-0.3	9.6	3.1	0.3	0.6	-0.1	-0.1	-1.2
11	-0.5	-0.2	-0.4	4.9	-1.7	0.2	0.6	-0.2	0.2	0.0
12	-	-	-	-	-	-	-	-0.1	-	-

주 : (일본) 수출입 전년동기대비, 기타 전기대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기준년(2010=100)임

(유로)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산업생산은 건설업 제외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제2015-4호)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